

Weekly 공감

No.326
korea.kr/gonggam
2015.10.19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기획특집 국민행복 키우는 유능한 정부3.0
특별기획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함께 걸어볼까요? '명품 단풍길 25選'
연속기획 야생화와 창조경제 / 신약산업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친구들과 함께 얘기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나에게
[이럴 때] 행복이다

내가 **세계에 전하고 싶은**
대한민국은 [ ] 이다

2045년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 ] 이다



지금 '한국다움'을 검색해서 키워드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응모하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ww.koreaourstories.kr

광복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브랜드 공모전 개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다움'을 보여주세요

QR코드로 응모
www.koreaourstories.kr

주제

대한민국을 세계에 전하는 국가브랜드

분야

사진·그림 / 음악 / 글쓰기 / 디자인 / 영상

기간

2015 마감
9.7(월) - 11.8(일)

심사 및 시상 일정

내부 심사	분야별 **후보작품**	국민온라인 투표	분야별 **대표작품**	전문가 심사	시상식 **12월**

자격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개인 / 팀 구성 가능)



정부3.0, 안전혁신 골든타임 사수하다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대구 지하철 사고, 성수대교 붕괴, 와우아파트 붕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그리고 세월호 침몰. 대형 재난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디어는 '안전불감증'을 주범으로 찍었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조직 개편, 제도 정비는 어김없이 부활했다. '사후약방문'은 쏟아졌지만 사고는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켜켜이 쌓인' 적폐가 안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안전적폐 청산에 '정부3.0'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 출범시킨 국민안전처는 적폐를 해소하고 '정부3.0'에 방점을 찍는 조직 개편이었다. 박근혜정부 국정 1기 성과 30선에 포함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화학사고는 재난사고 중 가장 위험하지만, 그동안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로 국밥'식으로 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여섯 곳의 주요 산업단지 인근에 국민안전처를 주축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인력이 합동 근무하는 화학재난방재센터가 설치됐다.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시스템 공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업장 합동점검으로 기업 부담은 최소화했다. 반면 정보 공유, 합동훈련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30분 이내 도착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고 사망사고 때 피해를 41%나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대형 재난과 국내외 대규모 행사 때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 경찰, 안전요원, 군인, 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다원화된 조직이 각각의 소통망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했다.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였다. 이제는 소방, 경찰, 안전요원, 군인 등 각 기관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선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음성, 문자, 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전달하면서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정확한 위치 확인,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신속한 응급 상황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민안전처를 구심점으로 재난·안전사고의 경우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연령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안전신문고, 생활안전지도, 재난안전데이터 포털 등이 '정부3.0'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3.0'이 안전혁신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선봉장이 되고 있다. G

Weekly 공감

CONTENTS

2015. 10. 19 No.326 통권 427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가을 산이 단풍 치마를 두르고 점점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 10월 중순 설악산을 물들인 단풍은 날마다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11월 초순이면 내장산과 지리산에서 절정을 맞을 것이다.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빛이 선명하다. 가을 햇볕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단풍길을 걸어볼 일이다.(셔터스톡)

01 **이 주의 공감**

04 **독자마당**

06 **공감 사진관**
코리아 인재를 찾습니다

특별기획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08 **"한·미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공동 가치와 이상으로 결속"**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미국 공식 양자 방문

10 **"달 탐사·우주 분야 한·미 협력 확대 희망"**
박 대통령 NASA 우주비행센터 방문… 사상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경제동맹 강화



특별기획 정상외교 성과

12 **현대기계공업 김철빈 대표**
"중남미 순방 동행으로 연 매출보다 많은 대박 계약 따냈죠"

핵심개혁

18 **창업을 꿈꾸는가? 'K-스타트업'에 물어보라!**
미래부, 창업 지원 효율화 방안…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20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 용지 조성원가 100~110%로 공급**
국토교통부,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 공급 기준 마련 행정예고

22 **한국형 무크 명품 강좌를 그대에게**
서울대 등 27개 강좌 10월 시범 서비스

24 **'올바른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적용**
오류·편향 없는 교과서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미래 준비

26 **역사교과서 Q&A**
우수 집필진 구성… 개발 과정 투명하게

28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균형 발전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30 **동네 서점에서 책 구입 때 15% 할인**
'문화융성카드' 출시





기획특집 국민 중심의 정부3.0

32 **'행복 대한민국' 만드는 유능한 정부3.0**

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과 복지 한곳에서 "OK"

36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재난 관리 골든타임 달성률 50%로 '쑥'

38 특허 일괄심사제도
지식재산권 확보 이렇게 빠를 수가!

39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체계
불법·위해 수입물품 부처 손잡고 차단

40 목격자 정보 공유 '스마트 국민 제보'
국민과 함께 '사회안전망' 씨줄 날줄 엮는다

42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발생 위험 높은 곳 통보… 식중독 걱정 '뚝'

43 인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긴급 상황 동시 소통으로 재난 대응

44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경보체제
금융사기 예방문자, 정부3.0이 보냅니다

45 원산도 행정·안전 통합운영센터
정부3.0으로 '셋'이 합치니 편의는 '세 배'

46 2015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도입… 공공기관 협업 조사

48 전문가 기고
지식 소통과 협업 지향의 중요성

정책 & 이슈

16 **韓, '아시아 네 마리 용' 가운데 수출 선전**
JP모건 '한국, 이웃 나라의 침체 속 성장' 보고서 발표

50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 권익 찾아준 행정심판 30년
온라인으로 더 가까이 찾아간다

52 **10월 멋진 달, 문화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1100여 개 공연과 축제 곳곳에서 개최

58 **야생화와 창조경제 / 신약산업**

60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포태→임신' '최고→촉구'로 바뀐다

문화, 교양 & 포커스

53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선
울긋불긋… 그와 나는 '방긋'

61 남극 탐험 30년 기념 국립해양박물관
'2015 극지 체험 전시회'
부산에서 만나는 남극과 북극

62 생활과학 이야기
추워지면 먹는다… 또 먹는다

63 **書로공감**
에머슨 인생학

64 소통과 공감
진실을 찾는 '목소리 소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 10. 1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김종덕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프린피아
구독문의 02-2625-3294 jjsmall@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한국직업방송 '능력중심' UCC 공모전



공모 주제 직업, 일자리, 스펙 타파 등 능력중심사회와 관련된 모든 독창적인 주제
응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개인/팀 상관없음)
접수 기간 11월 13일까지
응모 방법 한국직업방송 누리집(worktv.or.kr) 통해 제출
시상 내용 대상 1팀(300만 원), 최우수상 2팀(각 150만 원), 우수상 2팀(각 50만 원)
문 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직업방송매체팀 052-714-8294

다듬은 말 알리기 만화 공모전



공모 주제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다듬은 말 소개, 국립국어원 국어순화 누리집 소개
응모 자격 우리말 다듬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이상의 국민 누구나
접수 기간 11월 16일까지
응모 방법 이메일(malteo@korea.kr) 혹은 등기우편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으로 제출
시상 내용 최우수상 1명(200만 원), 우수상 2명(각 100만 원), 장려상 4명(각 50만 원)
문 의 국립국어원 공모 담당자 02-2669-9733(9653)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일 오전까지 이메일(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삼세판 퀴즈 Quiz

01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1972년부터 매해 10월을 '○○의 달'로 정하고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돕고 있다.

02 정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금융사기 감시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 이동통신사의 114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 경보를 발송하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제'를 마련했다.

03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맡아온 행정심판이 10월 1일자로 시행 ○○년을 맞았다.

324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선비 정신 **02** 세계산불총회 **03** 무형

당첨자
김은정(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7)
박기호(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20)
이은형(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
정윤식(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20)
최현규(경기 의왕시 덕장로 76)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26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2일 오전까지 이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공감 카툰



하늘은 높고 살맛 나는 세상 누리세요~

편집실에서

책을 읽지 않는 시대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종이책을 읽는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가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고 있다. 전자책을 읽는 이가 있겠지만 쉬지 않고 문자메시지가 오가고, 디지털의 말초적인 자극이 진중한 독서를 방해한다. 솔직히 필자도 지하철에서 책 읽어본 게 언제였던가.

이 아름다운 '독서의 계절', 갑자기 지하철에서도 읽고 싶은 책들이 나타났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작품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 같은 대표작들 일부를 읽을 때 심장이 멎는 듯 빨려들었다.

알렉시예비치는 기적 같은 작가다. 전통적인 소설가나 시인, 극작가도 아닌데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표현하는 작가다. 스웨덴 한림원 사라 다니우스 사무총장은 그의 작품을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것"이라며 그의 다성적(多聲的·polyphonic) 글쓰기를 높이 평가했다. '다성적'이라는 말처럼 그의 작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려 있다. 사건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의 역사', '감정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의 작품이 '목소리 소설(Novels in Voices), 오라토리오 소설, 합창 서사시, 증거소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 방식의 글을 쓰고 있을까. 알렉시예비치는 "현대의 인간성에는 전통적인 예술기법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렉시예비치의 책을 살 때는 동네 중소서점에서 살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BC카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만든 체크카드인 '문화융성카드'로 중소서점에서 책을 살 경우 카드사가 15%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 **정현상** 편집장 |

공감 사진관


EU관
10th ANNIVERSARY
Rexroth
ThermoFisher SCIENTIFIC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주)
Jatco
R&D
06
05
04
EDWARDS
INDITEX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코리아 인재를 찾습니다

10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취업 준비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우수 인재 채용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 기업이 참여했다. 사진 김형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미국 공식 양자 방문

“한·미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공동 가치와 이상으로 강력하게 결속”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웨스트포토맥 공원 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미는 박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양자 방문이다.

전후 70년, 우리의 광복 70년 및 분단 70년의 의미 있는 해에 이뤄지는 이번 방미는 지난 9월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고, 곧 이어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뤄져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10월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인근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격려하고 기념비에 헌화했다.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한국전쟁은 살아 있는 역사”

헌화 행사는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 헌화, 묵념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엔군 참전 21개국의 국기가 게양되어 그 의의를 드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들과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지갑종 유엔 한국전 참전국협회장, 그리고 클립튼 트루먼 대니얼(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손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 중에는 영화 〈국제시장〉 도입부에 소개된 ‘기적의 수송선’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일등항해사로 활약했던 해군 예비역 소장 제임스 로버트 루니 제독(현 뉴욕주 변호사)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난민 1만4000여 명을 구조한 루니 제독에게 영어로 “You are the true hero(당신이 진정한 영웅)”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남철수작전



뉴시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최고 책임자였던 에드워드 아먼드 장군의 외손자 토머스 퍼거슨 대령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헌화 후 인사말을 통해 "어려울 때 도와주신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는 살아 있는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한·미 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회생시키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만들어 여러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우호의 밤' 참석

"공동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통일 위해 함께 나아갈 것"

박 대통령은 이어 10월 14일 저녁 워싱턴 D.C.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만찬 행사인 '한·미 우호의 밤'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진화해온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이러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해온 미국 각계 인사들과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에서 "한국은 미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한·미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으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시작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을 연이어 주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비전을 함께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기까지 한·미동맹이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오랜 혈맹의 역사, 공동의 가치와 이상, 양국 간 든든한 가교인 재미동포사회 등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진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이 함께 써온 과거 60여 년의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미가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하며 만찬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밖에도 찰스 랭글 하원의원(코리아코커스 명예회장)과 게리 코놀리 하원의원(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존 홀드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라미 레즈 공정경쟁위원회(FTC) 위원장,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소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 가운데 3대에 걸쳐 우리나라를 도와준 다이애나 두건 전 국무부 본부대사와 한국에 근무한 평화봉사단원 등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소개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미국 명문 음악학교인 줄리어드스쿨 출신의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가 비발디의 '사계',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한국의 '아리랑' 등을 협연했다. 특히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벽면에 최첨단 프로젝션 기술로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모습과 경복궁, 수묵화 등 입체적 영상을 투사해 우리 문화를 소개했다. G

“달 탐사·우주 분야 한·미 협력 확대 희망”

박 대통령 NASA 우주비행센터 방문… 사상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경제동맹 강화

대한상공회의소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4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우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고다드 센터는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센터로 이번 방문을 통해 우주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 비즈니스 협력 증진을 장려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166명)이 동행한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최첨단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동맹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발효 4년 차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바탕 위에 투자·교역 활성화 등 한·미 경제동맹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우리 대통령으로 두 번째 미 우주센터 방문

“달 탐사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돼 우주자원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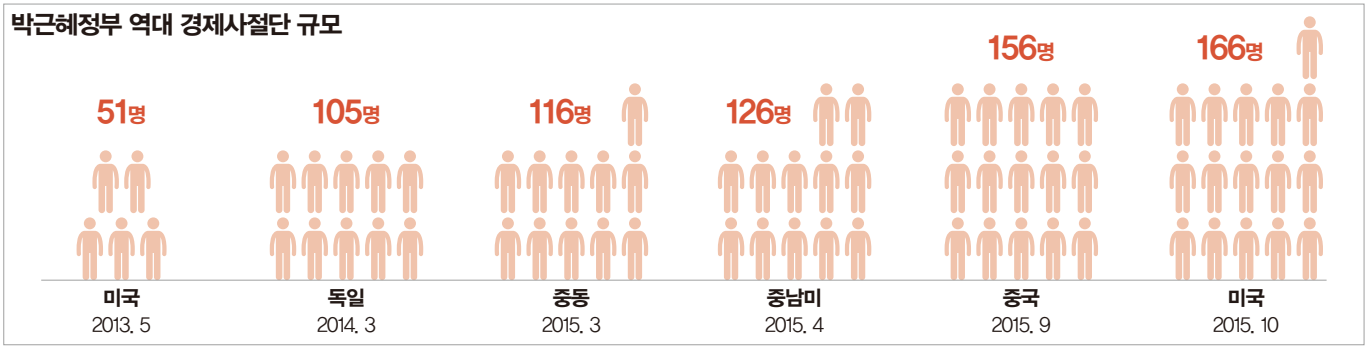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10월 14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시에 위치한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우주 개발의 역사는 짧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열한 번째 스페이스클럽 가입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무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주 개발 기술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응용기술이 나오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고다드 센터는 NASA 발족 이듬해인 1959년 설립돼 미국의 우주개발을 이끈 곳이다. 올해로 발사 25주년이 되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그 뒤를 이어 2018년부터 운영될 제임스 웹 망원경 개발·운영 등으로 알려진 첨단 우주기술 연구기관이다.

이번 NASA 우주비행센터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다. 앞서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센터에서 위성로봇시험실에 입장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우주인 스캇 켈리 씨로부터 영상 환영 메시지를 받고 NASA가 추진하는 화성 탐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고다드 센터가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중인 첨단시설을 시찰하고 위성로봇 작동을 시연했다. 또 한·미 우주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로부터 달 탐사, 우주통신, 위성 개발 등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우주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미 해군 출신인 스캇 씨는 지난 3월부터 역대 최장시간인 1년간 우주 체류 실험 임무를 부여받고 ISS에서 체류 중이다.

청와대는 "고다드 센터 방문은 한·미 양국이 우주 협력을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으로 추진하는 의미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의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에는 로이터, NBC 등 총 15개 외신사가 취재에 나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4일 오후(현지시간)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시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위성로봇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한·미 첨단 파트너십 포럼
외교동맹에 이어 '경제동맹' 다짐

박 대통령은 이어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한·미 공조로 제조업의 신(新)르네상스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한국과 미국의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320여 명(한국 측 170명, 미국 측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제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미 경제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스마트 혁명을 통한 제조업의 신르네상스 시대 개막'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제조 혁신의 근간인 연구개발(R&D)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협력 확대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협력 ▶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첨단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장, 헬렌 그레이너 기업가정신(PAGE) 대사와 환담을 나누고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준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10월 14일 워싱턴 D.C. 레이건 센터에서 열린 1 : 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경제사절단 57개사, 개별 참석 10개사를 포함한 우리 기업 67개사와 미국 측 바이어 약 90개사가 참석해 정보통신(IT)·정보보안, 보건의료·바이오, 방위산업 조달,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중심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1 : 1 상담회에는 항공 분야 1차 벤더인 에섹스(Essex), 열화상 카메라 1위 기업인 플리어(Flir), 세계 5위권 방산 기업인 노스롭그루먼과 레이시온사(社) 등 방산조달업체가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윌버트(Wilburt), 레이도스(Leidos) 등 IT·보안 분야 글로벌 바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유명한 루미노소(MIT 미디어랩 창업기업) 등 IT 기업도 참가했다.

이번 대통령 방미에 따른 1 : 1 상담회는 바이어 특성을 감안해 워싱턴에서는 정부조달·IT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뒤 소비시장 진출이 유망한 뉴욕(10월 15일)에서 한 차례 더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G

현대기계공업 **김철빈** 대표

“중남미 순방 동행으로 연 매출보다 많은 대박 계약 따냈죠”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특징은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을 대거 포함시키고, 이들의 해외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클리 공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경제사절단 참여로 얻은 성과 등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만난 기업은 2015년 4월 중남미 순방에 동행해 1481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현대기계공업㈜이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현대기계공업㈜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동행했던 현대기계공업㈜의 김철빈 대표는 요즘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남미 순방에서 무려 1481만 달러(약 170억 원)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회사의 연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김 대표에게 중남미 순방의 뒷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저희 회사를 쉽게 설명하면 현대자동차에서 40~60% 만들어진 반제품 엔진을 가져와 제조해 나름의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엔진에 대한 모든 컨설팅, 설치, 교육, 고품질의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책임감과 신뢰감을 주고, 그만큼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분업화의 장점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경쟁력을 활용해 고성능·고품질의 엔진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기계공업㈜은 디젤엔진을 제작해 수출하는 곳으로 김 대표가 1996년 3월 ‘제조업의 불모지인 제주도에서 제조회사가 잘되겠느냐’는 주위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뚝심 있게 밀어붙여 만든 회사다. 김 대표는 제주 출신은 아니었지만, 20여 년 전 출장길에 제주에 반해 지금의 회사를 제주에 차리게 됐다. 해운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덕분에 선박엔진 쪽에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25명의 직원을 두고 연 매출 80억 원에 달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간의 우려를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 현대기계공업은 여러 기종의 디젤엔진을 선박용 주기관, 디젤엔진 발전기 세트, 산업용·농업용 엔진으로 각종 용도에 맞게 제작·생산해 해외시



박해윤 기자

기업들이 살아갈 길은 오직 ‘수출’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김철빈 대표.

"중남미 지역에선 정상외교 순방으로 한국 업체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었죠. 일단 해외 바이어들의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1 : 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제가 공략하고 싶었던 4대 정유사인 페데베사와 만나 1481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장에 공급하고 있다.

4대 정유사인 페데베사와 1481만 달러 계약 체결
20여 년 만에 80억 원 매출 회사로 성장

현대기계공업은 1999년 베트남에 첫 수출을 시작한 이후 이듬해 싱가포르와 포르투갈, 2001년 스페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누아투 등의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이집트와 칠레, 캐나다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장하면서 현재는 총 47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김 대표의 경영 마인드 덕분이다.

"저는 기업들이 살아갈 길은 오직 '수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꽃은 마케팅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죠. 덕분에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외 85개국을 다녔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어요. 제가 돌아봐도 정말 많이 돌아다녔네요."

김 대표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현대기계공업은 수출과 관련한 수상을 많이 했다. 무역의 날 수출 공로로 받은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수출중소기업인상 수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보증 브랜드 선정, 무역진흥 공로 산업포장 수상,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선정 등이 그것이다.

해외 수출에는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졌던 김 대표지만, 중남미 지역의 세계 4대 정유사인 페데베사와 벌인 수출 협상은 유난히 적은 규모(100만~200만 달러)로 진행되면서 속을 끓여왔다.

그러던 차에 코트라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사절단'에 대





1 현대기계공업에서 주력으로 생산 중인 550마력 엔진. 2 페데베사 관계자들과 베네수엘라에서 상담하는 모습.

현대기계공업(주)의 해외 수출 현황



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수차례 해외를 오갔던 김 대표에게 뭔가 남다른 '느낌'이 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이 살아갈 길은 오직 '수출'
'기업의 꽃은 마케팅, 답은 현장에'

"중남미 지역에선 그동안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외교 순방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었죠. 일단 해외 바이어들의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1 : 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제가 공략하고 싶었던 4대 정유사인 페데베사와 만나 1481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죠. 저희 회사 연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계약한 업체 측은 현대기계공업의 기술력을 인정해 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355만 달러의 선수금까지 지급했다. 이후 해당 바이어가 한국에 들어와 현대기계공업을 직접 방문해 2차 사업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3명의 다른 바이어에게도 견적을 발송한 후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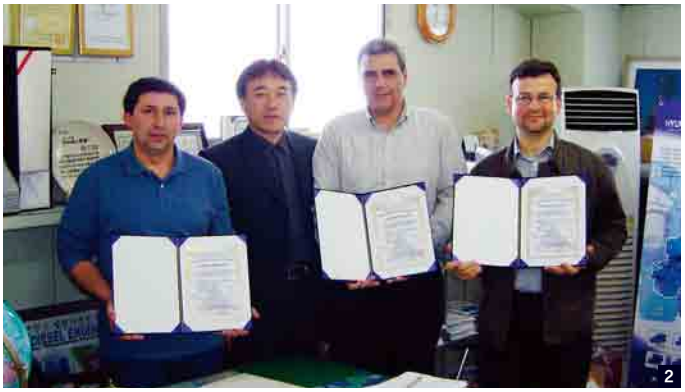
김 대표는 제주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현대기계공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보다 뛰어난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건 바로 '기술과 마케팅'이었다. 제주는 중소기업청 등 기업을 지원해줄 관련 기관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대신 김 대표는 코트라 등의 기관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 회사에 초청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계약 성공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죠. 하지만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코트라와 중소기업청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올 때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국내에 방문한 해외 바이어들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었죠. 저희 회사를 찾는 바이어들과의 계약 성공률은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기계공업이 늘 웃는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출이



1


2


3

1 4월 중남미 순방에서 페데베사와 1481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다. 2 한국을 방문한 칠레 바이들의 기술교육 수료증. 3 4월 중남미 순방에서 중동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주 업무인 회사였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으며, 원·부자재 가격 폭등에도 가슴을 졸여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부자재값 폭등은 결국 수출 단가를 인상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이어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이어들에게 환율 변동과 원·부자재값 폭등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을 반복했어요. 결국 어렵게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수출 단가를 조정하기도 했지요."

'경제사절단'과 '코트라' 등 적극 활용
중소기업 약점인 신뢰도, 브랜드 인지도 향상

현대기계공업의 해외 진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해외의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 시장개척단, 기술 교육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김 대표는 처음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들에 국내 관련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을 완료했으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사절단과 코트라 등의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대통령과 함께하는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약점인 '신뢰도'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경제사절단 덕분에 '대박'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왔잖아요. 저희 같은 기적이 다른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해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그의 꿈이다.

"꾸준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애프터서비스를 최소화하는 엔진을 개발해 생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신규 바이어들을 더 많이 확보해 현대기계공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韓, '아시아 네 마리 용' 가운데 수출 선전

JP모건, '한국, 이웃 나라의 침체 속 성장' 보고서 발표

글 연합뉴스

한국 수출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가운데 가장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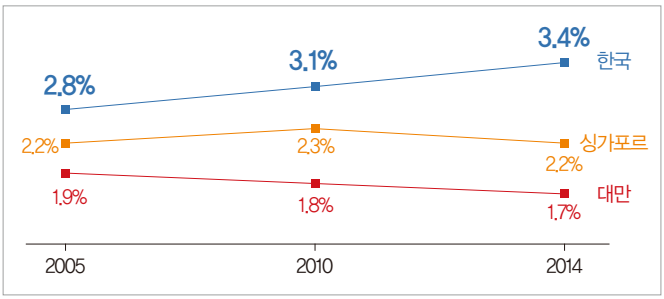
10월 15일 JP모건의 '한국, 이웃 나라의 침체 속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 수출이 지난해 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3.4%로 2010년(3.1%)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이는 2005년 비중(2.8%)보다는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은 2005년 1.9%, 2010년 1.8%, 2014년 1.7%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입지가 갈수록 좁아졌고 지난해 싱가포르의 수출 비중은 2.2%로 9년 전과 차이가 없었다. 2010년(2.3%)과 비교하면 비중이 오히려 떨어졌다.

원화의 실질 가치는 2010년 이후 7% 올랐지만 싱가포르와 대만 통화가치가 각각 10%, 5%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한국 수출의 선전은 더욱 두드러진다. JP모건의 임지원 연구원은 "한국은 대만과 싱가포르보다 수출 품목이 다양해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약화 등의 위기에 두 나라보다 받는 충격 정도가 덜하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각국의 수출액 순위를 봐도 한국과 아시아 경쟁국의 명암은 엇갈렸다. 한국의 순위는 2005년 10위(3050억 달러)에서 2010년 7위(4789억 달러), 2014년 6위(6055억 달러)로 꾸준히 상승했다. 싱가포르는 2005년 17위, 2010년 19위, 작년 19위로 답보 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홍콩의 수출 순위(40위)도 2005년(34위)과 비교해 6계단 떨어졌다.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 고도성장을 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국가 가운데 한국만이 최근 수출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올해 들어 한국 수출은 극도의 부진을 이어갔지만 1분기 수출 순위(5위)는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갔다. 블룸버그 집계치가 있는 올해 4월과 5월의 한국 순위도 5위였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맞으면서 한국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싱가포르·대만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JP모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난해 2조4068억 달러를 수출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미국과 독일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일본(4위)과 네덜란드(5위)도 한국을 앞섰다. 특히 중국의 수출 순위는 2000년 4위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5년 독일을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다.

눈부신 성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저유가 등으로 수출 부진을 겪었다. 중국도 그동안 급성장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올 1~9월 수출입 누계 총액은 17조87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중국 등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아시아 네 마리 용 가운데 그나마 선전한 한국 경제도 비틀거릴 가능성이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중국이 연착륙에 실패하면 "중국의 지역 투자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연계된 무역 감소로 수출 중심 국가인 홍콩과 한국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G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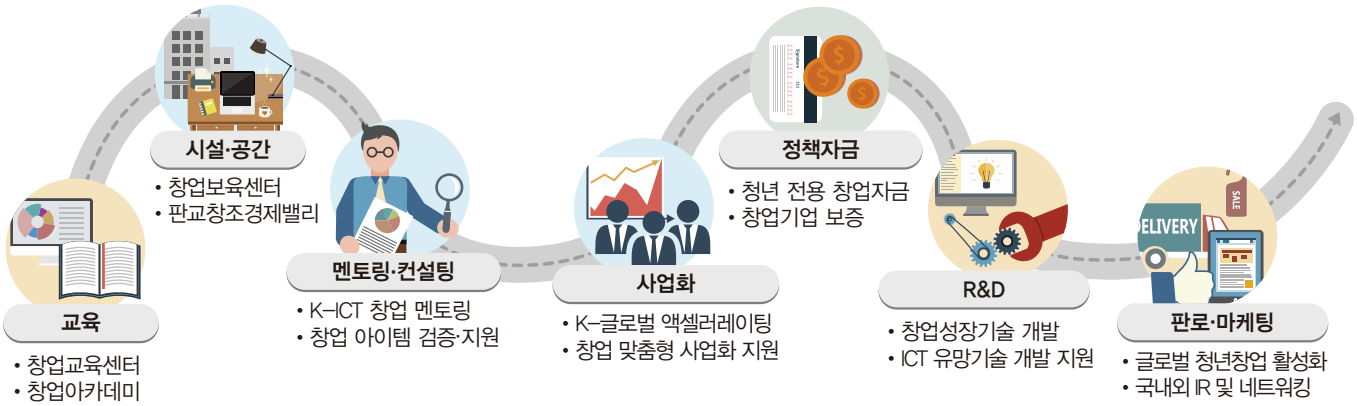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행정자치부
www.gov30.go.kr

창업을 꿈꾸는가? ‘K-스타트업’에 물어보라!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효율화 방안…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K-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창업을 꿈꾸는 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통합 창구가 마련된다. 올해 4분기부터 100여 개의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Startup : 신생 벤처기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되고, 청년 창업가 등의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창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점을 분석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간 창업 지원사업은 무수히 많았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돼 있어 창업자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렇듯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창업 지원사업 통합 브랜드 ‘K-스타트업’을 신설하고 유사 지원사업을 통합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 통합 94개에서 72개로 줄여

현재 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정부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창구가 없어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 94개에서 72개로 줄이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마케팅·해외 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8개 범주로 분류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창업 지원사업인 K-글로벌은 중복되는 부분을 모아 28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사업 명칭도 통합했다. 중기청도 이런 통합 과정을 거쳐 창업 지원사업을 47개에서 32개로 줄일 수 있었다. 이로써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창업자의 혼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자들이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미래창조과학부

지난 8월 4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4회 Let's Make 포럼'에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

수 있고, 지원사업 신청과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 통합 지원창구인 '싱글 윈도(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K-스타트업 누리집을 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사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금융, 특허, 법률, 정부 사업 등의 안내를 방문 상담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과 선정 등 절차상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 창업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요소 중 하나가 관련 서류 작성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표준화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적용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양식을 한글 프로그램만 사용하던 방식에서 실제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형식의 문서도 인정한다.

이 밖에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전문 평가위원의 비중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 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 사업성 위주의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원자를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찰 평가 등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 자금은 항목별로 엄격히 한도를 정해 사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항목별 한도를 폐지하고 사업비를 유연하게 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전에는 인건비 25%, 기자재 10%, 시금형제작비 20% 등 항목별로 한도가 제한됐지만 이제 지원 자금을 사업 모델 개발과 시장 진입비용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목별 한도 폐지로 사업비 집행 자율성 상승
지속성장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우선 K-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성과를 거둔 기업은 후속 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 적용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다만 시설·공간, 사업화 등의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사업 관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원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중복 방지도 점검한다.

또한 지역 창업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졸업 기업에 대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미래부는 ICT 분야 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K-글로벌 300' 대상 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 지원사업을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단순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사업들도 앞으로 K-스타트업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 용지 조성원가 100~110%로 공급

국토교통부,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 공급 기준 마련 행정예고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0월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1월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한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다.

앞서 지난 9월 4~5일 모집한 '1호 뉴스테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인천 남구)의 경우 2051가구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려 평균 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10월 5~8일 진행한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 아파트 청약 결과 총 2400가구 모집에 7623명이 신청해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3.2 대 1이었다.

행정예고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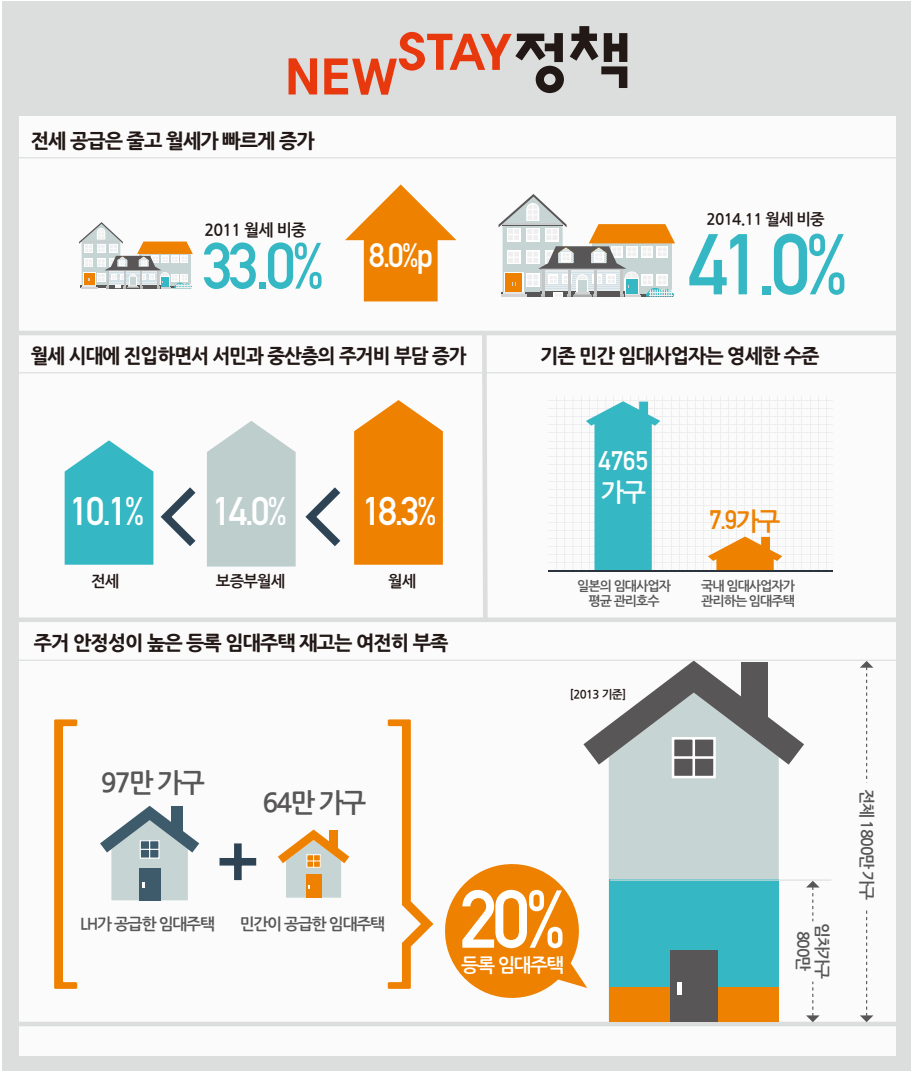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 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용도	공급 가격	공급방법
기업형(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용지	① 85㎡ 이하 : 조성원가 100% ② 85㎡ 초과 : 조성원가 110% *주변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 90% 이하로 공급	자격 제한
단기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자격 제한
분양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추첨
단독주택 건설용지	① 협의양도인 : 조성원가 110% ② 일반공급(실수요자) : 감정가격	수의계약 추첨
학교용지	① 공공시행자 : 무상 ② 민간 시행자 : 감정가격	수의계약
판매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등 상업용지	낙찰가격	경쟁입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 주택 유형별 기준 상업부분 : 낙찰가격	경쟁입찰
시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 유치원·보육시설, 의료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 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 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무료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통신시설(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전기공급시설(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낙찰가격	자격 제한
공공청사	조성원가	수의계약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참고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 이하)는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이다.

아울러 8년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 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연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민관 전문가의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 임대주택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하게 된다.

민관 전문가가 참가한 추진협의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를 최종 사업 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촉진지구 민간 시행자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까지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

* 의견 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K-MOOC) www.kmooc.kr

한국형 무크 명품 강좌를 그대에게

서울대 등 27개 강좌 10월 시범 서비스 오픈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무크(MOOC)가 한국에 상륙했다. 뉴욕타임스는 2012년 무크를 교육계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으로 꼽으며 "무크가 대중들을 위한 아이비리그를 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교육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크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K-MOOC'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크(MOOC)는 학습자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우수한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다.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다. 기존에 듣기만 하는 학습 동영상을 넘어 질의·응답, 토론, 과제 등을 통해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 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

10월 14일 첫 개통된 '한국형 무크 서비스'는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POSTEC),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에서 총 27개 강좌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강좌는 10월 26일(13개 강좌)과 11월 2일(14개 강좌)에 나눠 시작된다. 또한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에게 강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27개 강좌의 소개 영상과 일부 강의를 시작일 전까지 공개한다. 강좌는 각 대학 교수들이 직접 운영하며, 수강생은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정한 기준(퀴즈, 과제 등 평가점수)을 통과하면, 대학교수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크를 수강하려는 학습자는 누리집(www.kmooc.kr)에 접속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 후 강좌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강하면 된다. 학습자는 이메일 등으로 가입을 신청한 후 이메일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접속한 누리집에서는 무크의 특징인 양방향 학습을 위한 퀴즈, 질의·응답, 토론, 과제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자는 토론식,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을 이용해 무크를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교수, 외국이나 타 지역 학생, 직장인 등이 학문 공동체를 구성해 학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 대학 몇몇 곳에서는 무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해온 사례들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12년 3월 컨설팅을 통해 강의 내용에 적합한 학습 모델을 설계하도록 돕고 전용 강의실을 제공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은 2015년 현재 총 54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수가 직접 찍은 온라인 강의와 토론, 협동형 과제, 실험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면서 수업을 해온 것. 그 결과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즉 온라인으로 사전에 학습한 후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역(逆)진행 수업방식'을 통해 학습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10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받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크 활용 수업 진행하는 대학
학생들 능력이 다방면으로 향상되는 효과

울산과학기술대(UNIST)는 2009년 초에 플립러닝을 도입했다. 이후 2013년도에 32과목으로 플립러닝을 확대 적용하고, 2014년에는 전체 과목의 약 20%에 해당하는 35과목에 적용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및 토의형 학습이 가능해졌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와 집중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숙명여대는 2014년 8월 '글로벌 무크 캠퍼스'를 개설해 무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크 교육을 지

원하기 시작했다. 2015년 8월까지 해외 무크 강좌를 대상으로 16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해왔고, 총 9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무크에 대한 강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물론, 학습 효과 증대, 향후 활용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더욱 많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한국형 무크의 출범으로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일과 학습을 같이하는 성인 평생학습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대학들이 무크를 활용해 비용 절감과 학습 효과 향상, 특히 고등교육 기회 평등의 한 축으로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시범서비스 개설강좌 목록

대학명	과목명	교수명	개강일
경희대	호모 폴리티쿠스 : 우리가 만든 세계	유정완	11. 2
	세계시민교육, 지구공동사회의 시민으로 살기	김현	
고려대	일반인을 위한 일반상대성 이론	이종필	11. 2
	Quantum Mechanics For IT/NT/BT	김대만	10. 26
	민법학 입문	명순구	
	고전문헌과 역사문화	심경호	
부산대	생명의 프린키피아	김희수	11. 2
	사회적 기업 : 아름다운 경영 이야기	조영복	
서울대	경제학 들어가기	이준구	11. 2
	우주와 생명	김희준	
성균관대	논어 : 사람의 시야를 트는 지혜	신정근	10. 26
	창의적 발상 : 손에 잡히는 창의성	박영택	
연세대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명교	11. 2
	서비스디자인	김진우	
	우주의 이해	손영종	
이화여대	현대물리학과 인간 사고의 변혁	김찬주	10. 26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류철균	
	인간 행위와 사회구조	함인희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임석재	
포항공대	기계공학개론 : 연속체 역학과 유한요소해석	박성진	11. 2
	디지털 통신 시스템 : 변복조와 전력 스펙트럼	조준호	
한국과학기술원	동역학	김양한	11. 2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김기응 오혜연	
한양대	건축공간론	서현	10. 26
	정책학 개론	김정수	
	경영데이터마이닝	김종우	
	정보사회학 입문	윤영민	

* 대학명은 가나다순

Q&A로 알아보는 한국형 무크

Q 이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습자는 플랫폼을 통해 대학(교수)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수증을 받으면 학점이 인정되나요.

A 무크 수강만을 통한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강좌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와 기술적 보완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점 인정 등은 오프라인 평가와 연계하는 등 개별 대학이 일정한 요건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Q 국내 대학 강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대학의 강좌와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요.

A 서비스 초기에는 국내 서비스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내 강좌를 한국어(강좌에 따라 영어 자막 제공)로 제공하며, 해외 대학 강좌의 연계·제공은 2018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Q 해외 무크의 경우에도 이수율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A 기존 대학은 학생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학위를 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무크는 대학이 가진 지식과 학문을 확산하고, 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무크 이용자 현황을 볼 때, 수강생의 약 79%는 학사학위 소지자, 44%가 석사 이상이며, 50% 이상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무크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무크를 듣는 수강생은 학위나 수료증보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Q 무크가 확산되면 수도권 유명대학의 강의 독점 현상이 심해져 지방대학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A 한국형 무크는 기존 오프라인 수업을 전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대학 또한 우수한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으며, 학생 입장에서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학 수업을 혁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적용

오류·편향 없는 교과서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미래 준비

뉴시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0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 브리핑룸에서 역사 관련 기관장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월 1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이로써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2011년 검정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후 6년 만에 국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검·인정 도서의 비율은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속적으로 확대돼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비율은 85%에 이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의 경우엔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6년 만에 다시 국정화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2월 13일 업무보고 당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및 국·검·인정 구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학계,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달 23일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변화 추이

(단위 : 책 수)

구분	국정	검정	인정	계
제7차 교육과정(1997)	721(69%)	187(18%)	134(13%)	1,042(100%)
2007 개정 교육과정	334(39%)	138(16%)	392(45%)	864(100%)
2009 개정 교육과정	141(19.8%)	61(8.5%)	511(71.7%)	713(100%)
2015 개정 교육과정(안)	**138(14.8%)**	**107(11.5%)**	**685(73.7%)**	**930(100%)**

※ 디지털 교과서 및 e-교과서,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구분은 제외

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20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을 비롯해 20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명령, 20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인사로 구성되지 못해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집필진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로 배우게 돼 검정제의 장점이랄 수 있는 다양성이 퇴색되는 실정이다.

셋째,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개선의 취지 중 하나다. 실제로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해도 일부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1월 중 교과서 집필 착수
내년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교육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의 주요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첫째, 내용 구성의 균형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계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하며, 반만년 역사 속에서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관된 기준과 흐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편찬 준거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역사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해 위탁하며,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의견수렴 및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오류와 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의 과정에서도 역사 연구기관장, 역사학계 원로, 현장 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 및 수정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감수, 심의본 '웹 전시', 교사 연구회와 전문가 검토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를 11월 2일까지 시행하고, 11월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후 11월 중순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1년간 집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내년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육의 원천인 역사학 진흥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G

역사교과서 Q&A

우수 집필진 구성… 개발 과정 투명하게

교육부는 10월 12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11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내용과 의미, 향후 일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자료 **교육부** / 정리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Q 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에 대한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고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사회적 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국정제로의 전환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Q 균형 있는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가.

A 각 분야에서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겠다.

집필에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회 구성, 현장 교사 검토, 전문가 검토, 심의본 '웹 전시' 등 단계별 검토 과정에 맞춰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Q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나.

A 사건, 인명, 단체명 등을 맹목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역사의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토론이나 탐구수업이 가능한 살아 있는 역사수업이 교실에서 행해지도록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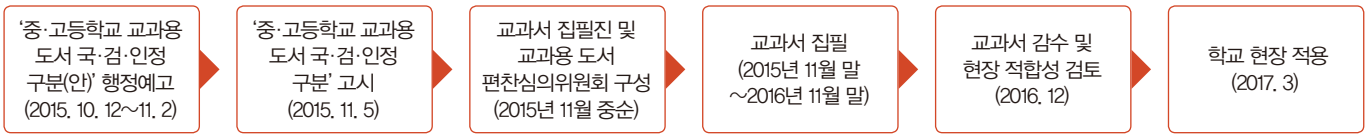
하나의 교과서에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이설(異說)은 병기해 토론수업이나 탐구학습에 활용토록 하겠다.

Q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건가.

A 우리나라도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검·인정제를 확대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그 비율이 85%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역사과목의 경우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과 이념 간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교과서의 잦은 오류와 편향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교과서 향후 추진 일정(안)



중등 국정 도서 편찬 절차



Q 교과서는 누가 집필하나.

A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정 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개정(2011) 및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1974~2010) 등 역사교육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해 위탁할 계획이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Q 전체 개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원회는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교과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해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다.

Q 집필기간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 충분한가.

A 11월 고시 시행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계획이다. 집필기간은 약 1년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고품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이다.

향후 추진 일정(안)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2015년 10월 12일~11월 2일)→'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15년 11월 5일)→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2015년 11월 중순)→교과서 집필(2015년 11월 말~2016년 11월 말)→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2016년 12월)→학교 현장 적용(2017년 3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Q 교과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A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는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 서술될 것이다. 국민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과서를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소임에 적합한 주체적 역사 인식과 서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겠다. G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균형 발전 추진

동아DB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개선해 교육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음).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12일 "교육재정이 더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약 40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내어 줌) 기준을 개선해 재정 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도하면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에는 지방의 교부 기준을 결정할 때 지역별 학생 수의 변동 추이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외부 전문가, 교육청의 부교육감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더불어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예산 담당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학생 수 변동 반영, 교육 여건 차이 개선 지역별 학생 수의 변동 추이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학생 수에 대한 교부 비중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표준교육비(학교, 학급, 학생경비)는 올해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학생 1인당 비용을 상향 조정하고, 기관운영비도 산정요소(학교, 학생, 교직원) 중 학생 1인당 비용을 상향 조정한다.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 기준이 강화되는 부문은 2015년 보통교부금(교부금의 96%, 특별교부금 4%) 배부 기준으로 총 교부금 54조 원 중 학교·학급·학생 수를 감안한 9조7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부 기준 개선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지역 간의 교육 여건 차이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 명예퇴직비·교육환경개선비 기준 개선 교원 명예퇴직비와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은 수요를 반영해 정하고,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정산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교원들의 명예퇴직비를 전전년도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교부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연도에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연도의 명예퇴직 수요를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반영하고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교부된 재원은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수요를 반영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비 역시 교부된 재원이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방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부 기준 개선을 통해 신규 교원 임용을 촉진하고 노후한 학교시설이 개선될 수 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

항목	산정 기준		비고
	현행	개정안	
교원 명예퇴직비	전전년도 교원 명예퇴직 교원 수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명예퇴직 교원 수 결정	당해 연도 수요 고려
교육환경개선비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교육환경 개선 계획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내 시설의 건축 연면적 결정	사립학교 포함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수	항목 신설
자체 노력 수요	• 감소 학급 수 • 고교 학업중단학생 비율 • 특성화고 체제 개편	항목 폐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항목	산정 공식 및 단위비용		비고
	현행	개정안	
교원 명예퇴직비	전전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정산금액	정산 규정 신설
교육환경개선비	20년이 지난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학교 내 시설의 건축 연면적, 정산금액	사립학교 포함 및 정산 규정 신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운영비		학교 규모에 따라 단위비용을 구분	항목 신설
교과교실운영비, 통폐합학교 기숙사운영비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단위비용을 정함	학교 규모에 따라 단위비용을 구분	

것으로 기대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위해 인센티브 강화 학교 통합, 학교 신설 후 대체 이전, 통합 학교 운영 등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대한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로 바뀐다. 또한 학교를 신설해 대체 이전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30억 원에서 50억 원, 중·고등학교는 50억 원에서 8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이처럼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유는 학생 수가 적정 규모 이하인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앞으로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부 기준 개선을 통해 적정한 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최근 서울 금천, 경남 산청, 전남 함평지역에서 진행된 학교 통합과 같은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수요 변화에 따라 교부항목 신설 및 폐지 2016학년도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교부항목을 신설하고 교육청의 노력과 관련성이 부족한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 이는 교육청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학교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고, 시행규칙은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016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

동네 서점에서 책 구입 때 15% 할인

'문화융성카드' 출시… 문체부·BC카드 결제액 1% '문화융성기금' 적립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대형서점가의 마케팅 경쟁에 밀려 고전하던 동네 서점가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BC카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는 10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융성카드' 출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문화융성카드'는 지역 서점의 활성화와 출판계의 선순환, 국민들의 독서 증진 및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출시되는데, 가입비와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다. 12월 출시된다. 도서 할인을 핵심으로 하는 만큼 슬로건은 '책이 있는 삶'이다.

이 카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전국 중소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15% 할인을 해준다는 점이다. 또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를 비롯한 4대 프로 구기 종목 관람권,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권, 영화 관람권 등의 할인과 CJ-ONE 포인트 적립 등으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융성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공립 문화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해서도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들 중에서 전국 중소서점에서 시행될 '15% 도서 할인 서비스'는 지역 서점이나 출판사에는 할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지역 중소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온라인 서점은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오프라인 서점 중에 대형서점들은 할인 부담금의 50%를 분담하게 되는데, 이는 직전 연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일부 대형서점의 경우에 해당된다. 다수의 지역 서점들은 별도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대형서점들은 자체 부담금으로 할인을 제공할 여유가 있어 이미 할인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이다.

15% 도서할인 서비스 우수한 도서콘텐츠 공급 이어질 것

문체부는 이 같은 서비스가 "지역 서점 및 출판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해 궁극적으로는 다양하고 우수한 도서콘텐츠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문화융성카드의 출시와 보급이 국민 독서문화 증진과 인문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화융성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와 BC카드는 카드 결제 금액의 1%를 '문화융성기금'으로 적립해 2016년 말부터 매년 1년간 적립된 금액을 문화창작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이용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활동을 후원하는 셈이 되는 것. 시뮬레이션 결과 체크카드는 100만 개 발급 시 연 3억 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이번 '문화융성카드'는 BC카드 핀테크(Fintech)와 연

동해 '모바일 카드'로도 발급된다. 이로써 카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첨단생활 속에서 핀테크 기술을 빠르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BC카드 측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의해 100여 개 지역 서점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고, 터치로 모바일 카드 결제가 가능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문체부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BC카드는 각사 임직원 및 단체 회원과 그 가족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시 퇴근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정부가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서정가제를 확대 개정한 바 있다"며 "올해는 지역 서점의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김형우 기자

10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서준희 ㈜BC카드 대표이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왼쪽부터)이 '문화융성카드' 출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문화융성카드 Q&A

Q '문화융성카드' 15% 할인은 도서정가제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A 문화융성카드에서 제공하는 15% 할인 서비스는 서점 매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 때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청구할인(카드 사용 시가 아니라 청구서에서 할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카드 할인의 경우에도 출판사, 오픈마켓, 서점이 제공하는 부분은 도서정가제 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Q '문화융성카드' 15% 할인에서 온라인 서점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행 도서정가제는 15% 할인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 서점의 경우 경영 형편상 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다수 지역 서점은 개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세한 독립서점으로서 카드사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카드는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 서점 방문 소비자의 도서 구매 의욕과 독서 의욕을 증진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Q '문화융성기금' 적립금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카드 결제 때 발생하는 매출액 1%를 '문화융성기금'으로 적립해 우리나라의 출판, 문학 등 창작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창작지원기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적립된 잉여금을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사례로서 기업 메세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양수열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

"서점도 살리고 독서문화도 키우고 두 토끼 잡는 획기적 시도"

문화융성카드 출시에 대한 지역 서점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형우 기자

"문화융성카드는 그간 출판사의 도서공급률 차별 때문에 대형 온라인서점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카드 마일리지 할인'을 지역 서점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지역 서점들이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주요 발판이 됐던 '저렴한 도서 가격'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를 통해 지역 서점들의 자생력 및 고객 흡인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무적입니다."

지역 서점업계 처지에서 보면 가장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역 서점들이 별도의 경제적 부담 없이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된 10% 가격 할인과 5%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고객 중심으로 판매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점도 좋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도서정가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서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 대한민국’ 만드는 유능한 정부3.0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나가겠습니다."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가진 대국민 담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를 보다 유능하게 하는 정부3.0의 대표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 및 복지 지원, 서민금융 상담 등 각기 다른 해당 기관들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통합한 곳으로, 이를 통한 취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 4.0점(5점 만점 기준)에 머물렀던 수요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4.22점(2015년 7월 기준)으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고용 따로, 복지 따로'로 기관 간 중복됐던 업무를 최소화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취업과 자립을 위한 진정한 징검다리 구실을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특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정부3.0의 미래형 협업 모델로 주목받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1월 처음 문을 연 경기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비롯해 현재 22곳이며, 2016년 40곳, 2017년엔 70곳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단 인력이 합동 근무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중독 발생을 예측함으로써 관계기관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예방·관리로 식중독 발생을 줄이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등은 모두 수요자 중심형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우수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인 정부3.0은 국민 생활의 편리를 살뜰하게 챙깁니다. 그 바탕에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3.0,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동을 거는 개방과 공유의 스마트 키(Smart Key)입니다. G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과 복지 한곳에서 "OK"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해 재취업 성공한 이채영 씨

"절박한 상황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갔는데, 직원들이 빠르게 대처해줘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두 딸을 키우는 이채영(45) 씨. 2002년부터 홀로 아이를 키워온 '워킹맘'이다. 그는 지역 시청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맡아 8년간 일했지만 계약직이라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올해 들어서는 재계약이 힘드니 나갈 준비를 하라는 통보까지 받은 터였다.

이 씨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해보았지만 나이 등의 문제로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근로 계약 기간이 어느새 만료 시점을 앞두게 됐고, 다시 취업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와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라 절박함만 더해갔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씨가 찾은 곳은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는 큰 기대 없이 센터를 찾았지만 성과는 컸다. 순천시 자립상담원과 상담을 하며 한부모가정으로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서비스가 연계된 순천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그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취득했다. 평소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을 꿈꿔왔던 이 씨는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복지 분야 전문가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후 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이 씨가 원하는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을 의뢰했고, 결국 그는 시청에서 퇴직한 뒤에도 쉬는 기간 없이 바로 노인복지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지금 무척 행복하다. 더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간호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보람도 느낀다고 했다. 가장 절박했던 순간, 재빨리 손을 내밀어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간호조무사로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다는 그는 "취업문이 열리지 않아 고민인 분은 미리 필요한 자격증을 따두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뜻한 조언을 전했다.

이채영 씨의 고용·복지 유관기관 연계 사례

지원 기관명	서비스 지원 내용	비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초기상담을 통해 순천시 자립상담원, 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비스 연계	순천고용센터 순천시
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순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분야로 구직 희망 • 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적극적 취업 알선 • 노인복지센터 간호조무사로 2015년 4월 1일 취업	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을 하나로 모아 국민들이 다양하게 고용·복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취업 지원은 고용센터, 복지 지원은 자치단체, 서민금융상담은 미소금융센터 등 각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일로도 여러 기관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비용 부담이 컸다.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는 이가 드물었다.

관련 기관 연계해 종합적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지난해 1월 출범, 10월 현재 전국 22곳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취업 지원, 복지 지원, 서민금융 상담 등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복합 애로사항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취업취약계층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취업 장애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듯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와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형 복합서비스 지원제도로 대표적 정부3.0 협업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1월 남양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22곳이 설치됐으며,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또한 지난해엔 서울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돼 있었지만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올 하반기에도 센터 설립 확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16년엔 40곳, 2017년에는 70곳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처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취업 실적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4점(5점 기준)이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올 7월 4.22점으로 올랐고, 취업률은 전국 일반교육센터 평균 11.4%에 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3.7%를 기록해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14년 9~12월 959건에서 올해 1~8월 4871건을 기록하며 입주기관 간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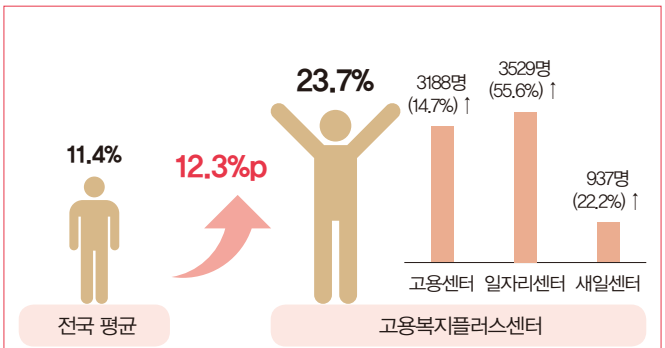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앞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을 비롯한 생활문화센터, 법률홈닥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서비스로 수요자들의 편리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G



고용노동부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원이 방문자의 고용·복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2015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반기 취업 성과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재난 관리 골든타임 달성률 50%로 '쑥'

(30분 이내 현장 도착)

뉴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울산 에스오일 원유 누출사고 현장.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 대처로 유출 규모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지난해 4월 4일 울산광역시의 에스오일 온산공장에서 75만 배럴 규모의 원유탱크가 파손돼 원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흘 동안 14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유출됐다. 유출량만 놓고 보면 2013년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에 따른 기름 유출량(최대 4750배럴)의 약 30배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 몇 달 전 출범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2012년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출범한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 전문기관. 구미(2013년 12월 5일)를 시작으로 서산·익산·시흥(2014년 1월 24일), 울산(2014년 1월 27일), 여수(2014년 1월 28일) 등 화학물질 사용이 많은 전국 6개 주요 산업단지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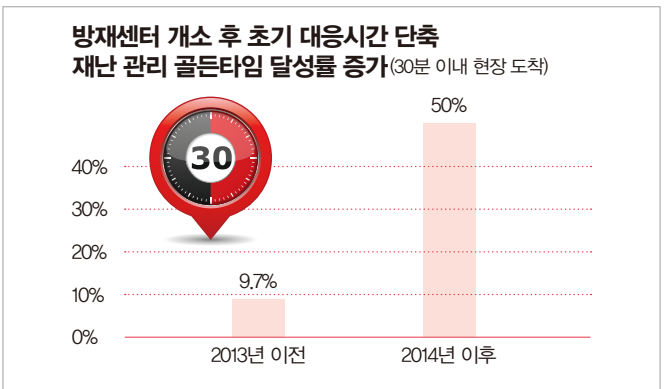
울산 합동방재센터가 출범 2개월 뒤 발생한 당시 사고에서 유출된 원유는 다행히 탱크와 기름차단벽 사이에 고여 있어 인근 바다로 흘러갈 위험성은 낮았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각 팀별(부처별) 역할을 수행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화학사고 위험 일깨운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계기 출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119구조본부의 화학구조팀은 유증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다고 보고 누출된 기름의 유증기 확산을 막기 위해 거품을 뿌리는 방식으로 방제작업을 벌였고, 구조본부의 현장지원팀이 출동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현장 주변을 차단했다. 울산해경은 해안에 오일펜스를 치고 바다로 연결되는 배수로에 기름 흡착포를 쌓아두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회사 측은 유증기 방제작업이 끝난 후 기름차단벽에 고여 있던 원유를 치우고 탱크에 남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조직 체계





아 있던 원유까지 4월 9일 모두 이송했다. 현장 수습 후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민건강 조사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공유·연계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규모 대비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합동방재센터는 정부3.0의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됐다.

화학사고는 가공할 규모의 피해를 낳는다. 강력한 폭발 외에도 누출된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2차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 1984년 인도 보팔 지역에서는 공장 폭발로 농약 원료인 메틸이소시안염(MIC)이 누출돼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다. 지난 8월 12일 중국 톈진항에서는 창고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대량의 시안화나트륨(일명 청산가리)이 폭발하는 대형 참사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우리에게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일깨운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환경오염 사고이자 첫 화학사고였다.

구미 사고 이후 합동방재센터 6개소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2014년 1월 센터 간 허브 구실을 할 '화학물질안전원'이 대전에 자리를 잡았다. 안전원은 화학안전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화학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지원한다.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출동과 더불어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가동해 사고 상황을 대응기관과 공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공유·연계한 합동방재센터는 2014년 1월 이후 총 393건의 현장 활동과 1806건의 예방 및 대비 활동(2015년 9월 말 기준)을 수행했다. 합동방재센터 출범 이전 9.7%(2013년)였던 '재난 관리 골든타임(30분 이내 현장 도착)' 달성률은 2014년 이후 50%로 높아졌다.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2013년 10월 76건→2014년 10월 86건)했으나 사망자 수는 감소(2013년 10월 67명→2014년 10월 46명)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2014년 12월 실시한 '합동방재센터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의 90%가량이 합동방재센터의 활동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화학재난 예방 노력 지속

화학안전과 시설, 위험경보제 시행

2015년 들어 화학안전에 대한 대비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의 합동방재센터 활동 이외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와 안전진단 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또한 환경부 내에 '화학안전과'가 신설되어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산단에서의 화학사고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설 투자도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10월 5일 여수산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합동방재센터 6개소에 대한 신청사 건립 착공에 들어갔다. 20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27억 원을 들이는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으로 한층 든든하고 효율적인 화학안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G

| 특허 일괄심사제도 |

지식재산권 확보 이렇게 빠를 수가!

특허 일괄심사 절차 흐름도

출원인	특허청	출원인+특허청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 심사 희망 시점을 지정해 일괄 신청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 후 신청 결과 통지	**일괄심사 설명회** 심사관이 기술 내용, 사업 내용을 청취하고, 예비심사 신청한 경우 예비심사 절차 진행	**심사 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 착수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케이블형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L사는 그동안 특허 심사 때문에 여러모로 속을 끓여왔다. 하나의 제품이지만 출원한 특허마다 심사 시기가 달라 애를 먹은 것. 게다가 첫 심사 결과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특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었다. L사는 느리게 진행되는 특허 행정에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정부3.0 시대에 특허 심사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사기간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 의구심을 가졌던 L사 관계자는 최근 특허를 출원하려고 특허청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하나하나 특허 진행을 하던 건이 이제는 '일괄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허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11건의 특허를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었다. 더불어 L사는 회사의 신상품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돼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정부3.0 시대에는 특허 등록이 더디게 진행돼 어려움을 호소해 오던 기업들의 고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객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 심사하기로 한 것. 이 때문에 기업들은 최적의 제품 출시 시기 등에 맞춰 하나의 제품에 대한 여러 지식재산권을 일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기업들의 제품 출시 시기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여러 지식재산권(IP)의 획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획득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을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13년 12월 일괄심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2014년 4월 일괄심사를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의 연구개발(R&D) 결과물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예비심사 기능을 추가했다. 예비심사란 심사 착수 전에 출원인 등과 심사관이 면담을 갖고 심사 의견을 교환하여 심사를 정확히 하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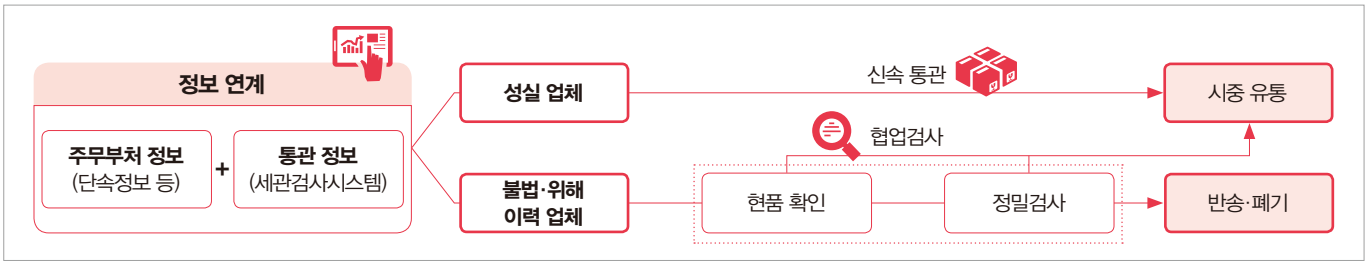
특허 일괄심사를 통해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 2014년 이후 특허 출원 140건, 상표 출원 2건 및 디자인 출원 4건이 일괄심사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이 약 1년 단축됐고, 그 결과 경제적 효과도 약 31억2000만 원이나 발생했다.

특허 일괄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각 항목 중에 해당하는 출원이다. 항목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다. 둘째는 2015년 도입한 국가 R&D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이다. G

|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체계 |

불법·위해 수입물품 부처 손잡고 차단

협업검사 업무 흐름도



출처 : 관세청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지난 8월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로 독극물인 시안화나트륨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시안화나트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졌다. 이에 환경부와 관세청은 시안화나트륨의 수입 실태를 조사해 지난 5년 동안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한 104건 중 1건이 환경부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시안화나트륨은 국내 반입 시 환경부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시안화나트륨의 환경부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반입시킨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관세청이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진행함에 따라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사용을 금하고 시안화나트륨 보관시설을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검사기관 등은 9월 23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가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통관 정보, 인증 상세정보, 유통 단계 불법 이력자 정보를 공유하고, 수입 단계에서 의심물품 선별과 안전인증 여부 확인, 중금속 함유 등 제품 안전성에 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 수입제품 501건(전체 수량 116만 점, 약 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전기용품으로는 조명기기(343건, 68%)가 가장 많았고, 공산품(어린이용품)으로는 완구(95건, 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산품 중에는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도 많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통관된 제품을 회수하고, 관세청은 적발제품 중 통관 보류 중인 제품을 반송·폐기하는 한편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는 고발 조치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는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검사해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 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뒤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일단 유통되면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협업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협업검사 대상에 석면 제품을 추가하고, 2017년까지 협업검사 대상을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

| 목격자 정보 공유 '스마트 국민 제보' |

국민과 함께 '사회안전망' 씨줄 날줄 엮는다





'스마트 국민 제보' 웹 및 앱 화면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궂은 날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일을 나간 A씨. 그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온 뺑소니 차량에 치여 6개월의 입원과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 가족은 하루라도 빨리 가해차량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려볼까, 사고 현장에 현수막이라도 붙여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다행히도 우연히 사고 광경을 목격한 한 대학생이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해 제보를 한 것.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며칠 지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인 '스마트 국민 제보'는 교통사고, 보복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목격하고 보유한 영상정보(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로 찍은 것)를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경찰에 제보해 민관이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사회안전망 모델이다.

그동안 경찰이 보유한 채널인 방범CCTV, 현수막 등만으론 뺑소니 사고에 대한 증거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영상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현장 등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보유한 영상매체(스마트폰, 블랙박스 등)를 활용해 경찰에 제보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다중의 광범위한 제보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스마트 국민 제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는 국민이 보유한 영상자료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간편히 제보할 수 있게 돼 뺑소니 사고는 물론 보복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용이해졌다. 수면 아래에 있던 다수의 제보를 수면 위로 유도해 사건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 것. 지난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스마트 국민 제보는 5만1040건. 7월 이후론 월 1만 건 이상이 접수됐고, 매월 120% 이상 증가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접수된 24건의 사건 관련 제보 중 4건은 실제 수사에 활용됐다.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비롯해 교통신호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등 고질적이고 현장 단속이 곤란한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관련 신고도 3만4425건이 접수돼 이 중 83.7%인 2만8700건이 과태료 처분 등에 활용됐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 증가했다.

스마트 국민 제보 대상

범죄 제보	뺑소니, 강도, 절도, 사기, 공갈, 약취유인 등 11종
공개수배 범죄	긴급 공개수배, 공개 지명수배
교통신고	보복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등 13종
몰카 성범죄 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범죄 영상 신고
실종자 검색	실종아동 등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신고처리 현황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게재
연계	실종자 검색,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안전 대한민국 Go!Go!

스마트 국민 제보 월별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합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접수(건)	51,040	328	3,005	7,996	10,447	12,945	16,319
처리(건)	42,869	271	2,546	6,679	8,944	10,882	13,547
처리율(%)	84.0	82.6	84.7	83.5	85.4	84.0	83.0

※ 월별 접수 건수, 매월 약 120% 이상 증가

스마트 국민 제보는 현재의 치안 문제를 경찰의 역량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격자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안심치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민 각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목격한 사건정보를 손쉽게 촬영·전송·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범죄 해결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법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스마트 국민 제보 누리집 회원 가입자는 5만여 명, 앱 내려받기 건수는 8만여 건에 달한다.

타인 위협 보복운전 신고 기능 신설
정부3.0 우수 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경찰청은 또한 신고 영상 등록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최소화하고 영상 처리 절차를 개선해 신고된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차량을 급정거하거나 급차선 변경 등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를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접수하는 기능을 지난 7월 신설했다. 9월부터는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동영상 유포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카메라 촬영 성범죄 제보 기능도 추가했다.

기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와 협력하면서 '정부3.0 브랜드 과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기능을 구현한 스마트 국민 제보는 지난해 8월 1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3.0 핵심 브랜드 과제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중앙부처 정부3.0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 제보와의 차이점은 '익명 제보'를 허용함으로써 제보자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모두 서비스해 제보 플랫폼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상에서 주변의 사건·사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과 애플(앱 스토어) 마켓,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앱 마켓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웹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창에서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입력해 누리집(onetouch.police.go.kr)으로 이동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 제보 서비스가 우리 주변의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제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더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

|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

발생 위험 높은 곳 통보… 식중독 걱정 '뚝'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인천 남동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여름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식중독 발병률이 높아 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정부가 식중독 발생 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통보해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씨는 평소 식중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이다. 덕분에 이 씨는 올해부터 매월 식중독 예측 자료를 참고해 관내 지역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예방하고 관리한 결과, 인천 남동구에서는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식중독 발생이 줄었고 이 씨 또한 식중독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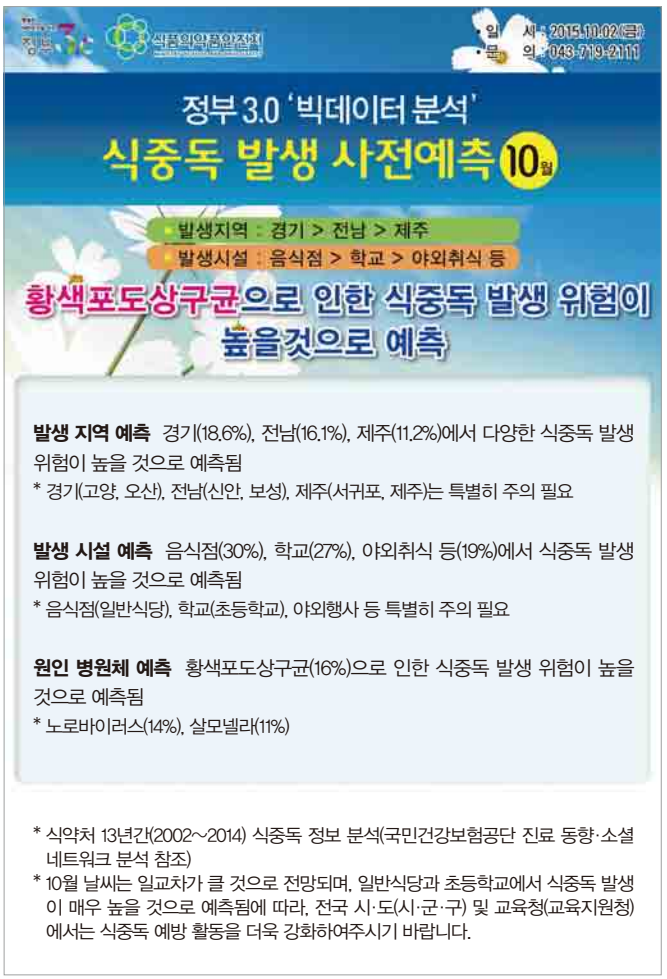
정부가 식중독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중독 발생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식중독과 관련된 기관 등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해 식중독 발생을 낮추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동안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계절별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 차단은 잘해왔지만,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장소를 점검하고 관리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은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

이에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장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컨설팅, 교육이 시급했다. 더불어 식중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스스로 예방하고 주의하도록 알려주는 기능도 필요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해 식중독 지역과 장소, 원인 병원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2015년 1월부터 시·도(시·군·구), 교육청, 지방청, 협회 등에 매월 초 통보됐다. 이 자료를 식중독에 대한 지도점검, 컨설팅, 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한 것.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학교의 영양사와 관련 협회 등에 '식중독에 주의해달라'는 당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식중독 발생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식중독 환자 수가 41% 감소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을 비교해봤을 때 평균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식중독 예측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중독 발생 예측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런 예측지도 서비스는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2015년 12월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과 식중독 관련 종사자들에게 관내지역 위험도·발생 동향 분석 예측지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G

| 인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긴급 상황 동시 소통으로 재난 대응





인천시청

인천시는 구조대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방본부에 구조를 요청하고 사고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0일 인천 계양경기장. 갑자기 경기장 조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안전을 담당하던 현장요원 김모 씨는 휴대전화로 사고 영상을 녹화해 소방상황실과 경기장 밖에 있는 다른 현장요원에게 긴급히 전송했다. 영상을 받아 본 상황실에서는 즉시 사고 원인을 알아차렸고, 정전은 10분 만에 정상화돼 큰 문제 없이 경기가 재개될 수 있었다.

당시 김모 씨와 소방상황실, 경기장 밖 현장요원이 신속하게 문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덕분이다. 이 시스템은 인천시가 경기장에 배치된 안전·운영요원 4000여 명의 개인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응급·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즉시 상황실에 사고 보고 및 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중앙 컨트롤타워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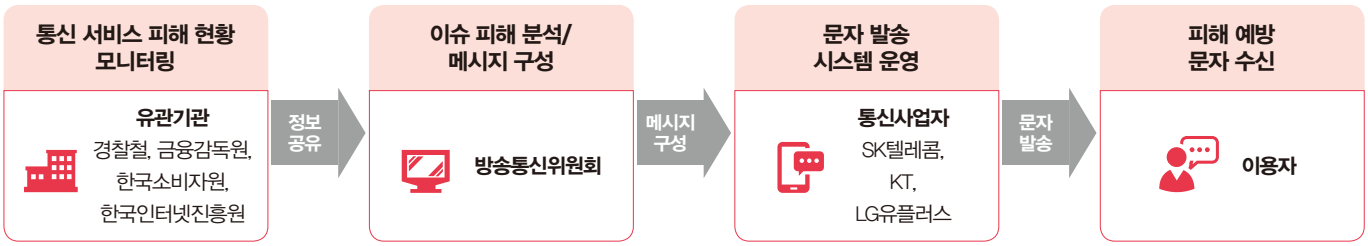
이전에는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 경찰, 안전요원, 군인, 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다원화된 조직이 각자의 의사소통망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1차)한 뒤 다른 기관으로 전파(2차)하면 각 기관에서 현장 안전요원에게 최종 전파(3차)하는 식이었다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통해 구축된 무선통신체계를 통해 각 기관이 하나의 그룹으로 동시에 소통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해 다자 간 음성 통화와 대화가 가능하고, 사고 영상을 전송할 수도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사고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간단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본인 인증만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비용을 들여 무전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했던 부담을 덜었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인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응급구조와 상황 보고가 5600건, 스마트폰 실시간 무전통신이 1만 건에 이르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를 통한 안전요원과 소방상황실 간의 신속 정확한 정보 전송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재난과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협업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 시·도 소방본부 약 1380대의 차량에서 재난 현장의 영상을 전송하고 119 상황실에서 이를 관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개최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에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활용됐으며,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섬 지역의 환자를 배로 이송하기 위해 소방서와 바다 구급선인 '구급 나르미선' 150개를 연결하는 데 시스템을 활용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G

|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경보체제 |

금융사기 예방문자, 정부3.0이 보냅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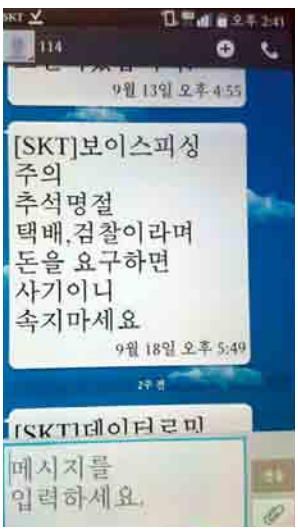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윤철진(가명·30) 씨는 지난 추석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확인해야 하니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받은 윤 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그 순간 며칠 전 받은 피싱(Phishing : 휴대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주의 경보가 생각났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추석을 전후로 택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라는 114 문자 안내를 받았던 것. 윤 씨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각종 금융사기가 횡행하면서 노인,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금융사기 감시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 이동통신사의 114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경보를 발송하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피싱 사기 피해액은 2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6% 증가했다. 특히 범인들이 검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가 가중됐다. 이에 반해 사기 피해가 급증하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했을 때 금융사기 감시기관들의 대응은 보도자료 배포 등 개별적인 피해 주의보 발령에 그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전달 수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경보체제는 이같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에 의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강력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통신 서비스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모니터하는 임무를 맡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경고 메시지를 구성한다. 광범위한 피해나 피해액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동통신 3사가 문자서비스를 통해 4800만 명의 가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의사항과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한 주의보를 발령한다. 문자메시지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동통신사 명의(114)로 전송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특히 정부3.0 방식에 따라 기존의 개별적, 대증적 피해구제에서 체계적,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실

올 9월 추석을 앞두고 이동통신사가 전송한 금융사기 피해 주의 문자메시지.

앞으로도 정부는 연중 금융사기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언제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공익광고와 교육·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방송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키로 했다. G

| 원산도 행정·안전 통합운영센터 |

정부3.0으로 '셋'이 합치니 편의는 '세 배'!

충남지방경찰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해경이 합동으로 민원 및 긴급상황을 처리하는 '원산도 행정·안전 통합센터'가 지난 7월 7일 개소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애 찾는 데 관할이 무슨 상관이고, 애만 찾으면 되지!"

올해 6월 개봉한 영화 〈극비수사〉의 한 장면. 한 여성이 형사인 남편에게 유괴된 친구의 딸을 찾아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거절한다. 아내는 남편을 질책하며 이같이 내뱉는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이 처리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따른다. 특히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행정기관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모든 해당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행정기관들은 문제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하지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겪지 않는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3개 기관 근무자가 한곳에서 합동 근무하며 민원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함께 대응하는 '원산도 행정·안전 통합운영센터'가 올해 7월 설치된 덕분이다.

센터는 기관별 인력과 장비를 상호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해 소관이 다른 민원을 주민이 단 1회만 방문해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지갑(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땐 지자체와 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통합센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센터는 응급환자 이송, 해상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 및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출동함으로써 기관 간 이른바 '떠넘기기' 문제를 없앴다. 실제로 원산도 해저터널 공사 현장 부근 덤프트럭의 비산먼지와 과속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도로를 점령했을 때 3개 기관 근무자가 함께 출동해 공사 책임자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했다.

원산도는 면적 7.04km^{2}에 인구가 1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그간 보령경찰서 원산도치안센터,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보령 해양경비안전서 원산도출장소 등 3개 기관이 개별 운영되어 소관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민원 처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 통합운영센터만 방문해도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원산1리 이장 김모 씨는 "각 기관이 모여 있으니까 관할 떠넘기기가 없어지고, 통합센터가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되니까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충남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경찰, 지자체 공무원, 해경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업무 지식을 교환할 수 있고, 도서지역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이 보유한 헬기, 행정선, 함정 등 장비를 상호 지원할 수 있어 1+1+1=3 이상의 시너지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지방경찰청, 보령시청, 보령 해양경비안전서는 2018년 원산도 내 연륙교가 완공되면 치안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운영센터의 인원을 확충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충남 내 도서 전 지역으로 통합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2015 인구주택총조사 |

‘등록 센서스’ 방식 도입… 공공기관 협업 조사



통계청이 5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10월 24일부터 실시된다. 2010년 11월 1일 경북 울릉도에서 울릉읍사무소 직원이 울릉도 주민에 대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모습.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통계청이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올해 실시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20%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인터넷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구의 조사원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방문조사를 벌인다. 표본으로 선정돼 조사안내문을 받은 내·외국인은 인터넷에 참여번호를 입력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이름, 나이, 교육 정도, 혼인 상태, 통근·통학, 경제활동 상태, 임차료, 자녀 출산 시기 등 52개다. 조사 최종 결과는 인구·가구·주택, 출산력, 통근·통학, 고령자, 여성, 1인가구 등 주제에 따라 내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종교, 자녀 출산 시기, 경력 단절 여부 등의 신규 조사 항목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상과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가구 분야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 민간기관과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먼저 기존의 전수조사 부문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대체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조사한다. 등록 센서스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24종의 행정자료는 통계청이 13개 주요 부처 및 기관에서 제공받아 집계·분석 작업을 거친 후 통계자료로 전환해 인구·가구·주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센서스를 구현해 총조사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방법과 조사 지역의 누락 및 중복을 최소화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를 위한 080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현장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예산을 절감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 동원 인력은 5만 명으로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6만9000여 명이 줄어들어 14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읽고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조사 응답자로 선정된 분들은 국민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이웃, 후손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G

201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통계청

대한민국의 내일에 국민의 말씀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세요

[11월 1일 ~ 11월 15일]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201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 ▶ **조사기간 :** 10월 24일 ~ 11월 15일
-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10월 24일 ~ 10월 31일), 방문 면접조사 (11월 1일 ~ 11월 15일)
- ▶ **조사대상 :**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 • 외국인
- ▶ **인터넷 조사참여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www.census.go.kr

| 전문가 기고 |

지식 소통과 협업 지향의 중요성



동아DB

'정부3.0 체험마당' 개막식이 열린 지난 4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한 시민이 119 영상통화 시연을 하고 있다.

이향수 | 건국대 행정학부 교수

최근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애플과 삼성이 창업 5년차 벤처기업 '샤오미(小米)'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저가 짝퉁의 이미지를 지녔던 샤오미는 어느 순간 혁신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다.

샤오미의 약진은 독특한 경영 방식과 제품 개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직원들이 직위에 상관없이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지식 공유에 대한 보상 역시 철저하다. 조직 내부만이 아니다. 고객들에게 운영체제(OS) 등 제품 개발과 관련한 참여를 독려해 조직 외부의 지식까지도 아낌없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활용한다. 이것이 협력적 집단지성의 힘이다.

공무원들이 접하는 행정 환경도 민간 기업 못지않게 다변화하고 있다. 행정 환경은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 네트워크화 등을 겪으면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난제들은 여러 기관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분야의 지식이나 한 기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내 정보 지식의 양을 늘려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선 공공부문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 지식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고, 협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 소통과 협업을 지향하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예전과는 다른 정부를 지향한다. 바로 정부3.0이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 가치 구현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식 공유와 협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 내 공무원 간의 지식 공유 및 협업, 둘째는 국민과의 지식 공유 및 협업이다.

먼저, 정부는 공무원 간 지식 공유 및 협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나라e음), 범정부 의사소통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식 공유 등 온라인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 정보와 정책 지식을 클라우드 형태의 범정부 지식 공유체계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자료나 문서 등을 기관의 경계 없이 어느 기관에서나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 간 정보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 화두가 된 안전·재난관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 20여 개 기관과 27개의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화학 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산업단지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공동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둘째, 국민과의 지식 공유 및 협업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진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나 지식을 활용하려는 노력 역시 활발하다. 기관별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정부3.0 브랜드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공무원과 함께 정책 디자인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이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나 지식의 범위는 정부 부처 및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돼 국민이 보유한 정보나 지식으로 확장됐다. 정책을 다루는 주체의 범위가 공무원, 교수 등 소수 전문가와 정치인 등에서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된 점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 가치 구현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정부부문 내외 지식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지속될 것인가?

정부 내 지식 공유 및 협업은 대부분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다. 물론 IT를 활용해 기관 간 지식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IT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나 지식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주체는 바로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연계·공유·협업하라고 채근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부3.0이 지향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공무원을 위한 인센티브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기관과 열심히 협업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자료나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이해나 배려 없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협력이나 공유를 강요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의 협업을 통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3.0 브랜드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3.0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참여와 호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3.0에 대한 국민과의 의사소통 양을 더 늘려야 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나 과제의 경우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 알려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G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 권익 찾아준 행정심판 30년 온라인으로 더 가까이 찾아간다


이형아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의 권익을 비용없이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맡아온 행정심판이 10월 1일자로 시행 30년을 맞았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준사법적 구제 절차를 말한다.

1985년 시행된 행정심판은 꾸준히 늘었다. 그 결과 연간 청구 건수는 지난 2010년 최초로 3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만5301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16.3%인 4131건이 구제됐다. 이는 행정심판이 그만큼 큰 구실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행정기관들의 잘못된 처분이 비일비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정심판 30주년을 맞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에게 행정심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들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2008년 출범한 기관이다. 행정심판은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다.

행정심판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달라.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권리 구제 절차다. 예컨대 국가 면허·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사업장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이 해당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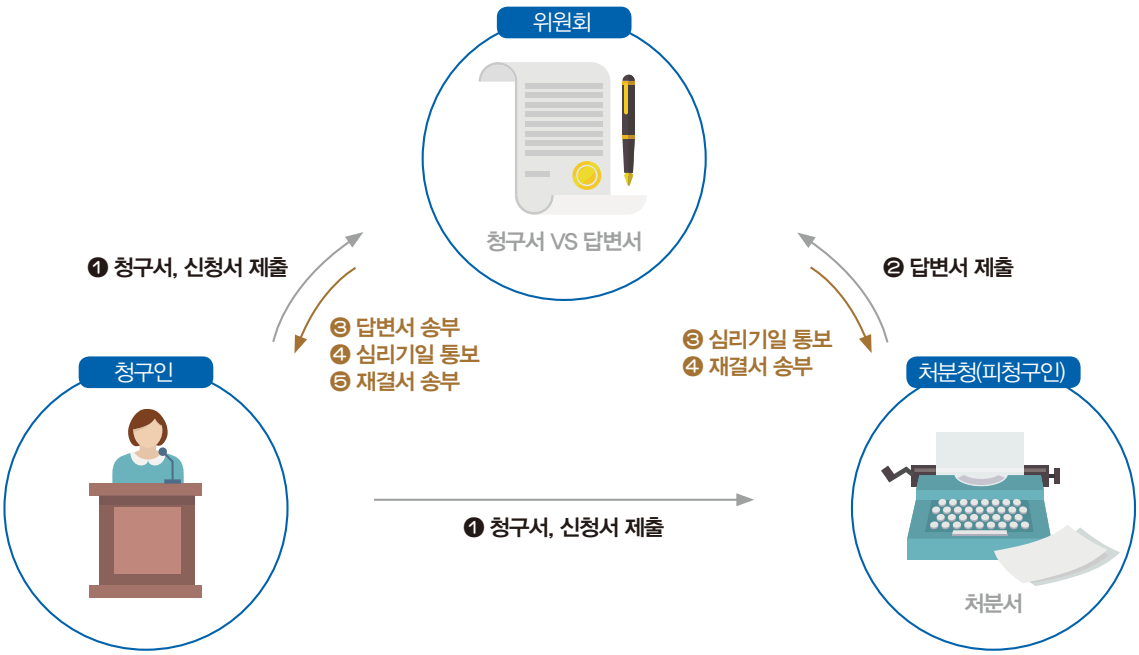
행정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절차적으로는 신속·간편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권익 구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도 행정심판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나.

"예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어사나 조선시대의 사헌부, 의금부, 신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다. 행정심판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소원제도는 1951년 소원법 제정으로 도입되고, 1964년 하위법령이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했다. 다만 1980년 소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가 헌법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적 근거를 가졌는데 이 또한 부실했다."

행정심판제도가 지금의 권익구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985년 10월 1일 소원법의 한계를 보완한 행정심판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이 법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격상됐다. 이후 1996년, 2008년 두 차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각부 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또한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기존 처분을 내린 기관의 결정을 다시 물어야 하는 과정을 폐지하고, 제삼자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하게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뭔가.

"지난해 운전면허 관련 사건이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을 넘어 운전경력,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성 등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100일 정지처분은 50일로 변경해 구제한다. 최근에는 노동, 건설, 교육 분야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분야의 행정심판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있다면 알려달라.

"국민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단일 창구인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지역을 순회 방문해 구술청취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는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행정심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서비스다."

온라인 행정심판을 확대하는 배경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행정심판이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행정심판에서는 유사사건에 대한 재결례·상담사례 등 지식정보, 청구서 작성 지원 등 상황별 도우미 서비스, 각종 신청에 대한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 재결서 등 전자문서의 온라인 수령 및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심판 기관 간 인용률 편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10월 멋진 달, 문화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함께 만든 문화, 함께 누릴 문화' 1100여 개 공연과 축제 곳곳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경북 영천에서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영천에 설치된 강대영 작가의 작품 '모기자리'. 이 행사에는 다양한 미술품과 함께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10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다. 아름다운 노랫말과 음률 덕분인지 10월뿐 아니라 다른 때도 결혼식 축가로 사랑받고 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 사랑은 가득한 걸 /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 모두가 너라는 걸 /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 가사만 음미해도 10월이 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처럼 감동적인 10월은 '문화의 달'이기도 하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1972년부터 매해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해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돕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을 지원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의 달'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를 저렴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과는 다른 개념이다.

2015 문화의 달 슬로건은 '함께 만든 문화, 함께 누릴 문화'다. 이는 국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행사를 통해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청년 문화 기획자들의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345개, 지방자치단체 720개, 다른 부처 3개 등 1068개가 진행된다. 행사 분야별로는 공연 465개, 전시 126개, 축제 198개, 기타 279개 등이다.

특히 올해는 경북 영천에서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열렸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마상재(馬上才 : 달리는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림) 시연과 조선통신사 행렬 등 주요 행사와 부대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영천은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 문화 교류지다.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 화친을 위해 조선통신사(외교사절단)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 동안 조선통신사가 12차례 파견되는 과정에서 교통의 요충지인 영천을 11차례 경유한 것이다. 경상감사(도지사)는 국왕을 대신해 300~5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행원들이 영천을 지날 때 전별연을 베풀고, 금호강 둔치에서 전통 기병무예에서 진화한 마상재를 선보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영천 기념행사와 함께 대구국제오페라축제(10. 8~11. 7),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 15~11. 13) 등 유명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시·도의 대표행사로 제3회 인천국제현대무용제(10. 29~11. 1), 세종시민을 위한 한마음음악회(10. 31), 제21회 충북민속예술축제(10. 23), 전주비빔밥축제(10. 22~25), 광주세계김치축제(10. 24~28)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15 한복의 날 행사(10. 21)가 열려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북서울 꿈의숲에서 2015 전국생활문화제(10. 24~25)가 열려 전국의 대표적인 동호회 회원들이 끼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을 관광주간(10. 19~11. 1)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 2~31,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10. 23, 서울 예술의전당),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페스티벌(10. 26~28,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이 준비돼 있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울긋불긋… 그와 나는 '방긋'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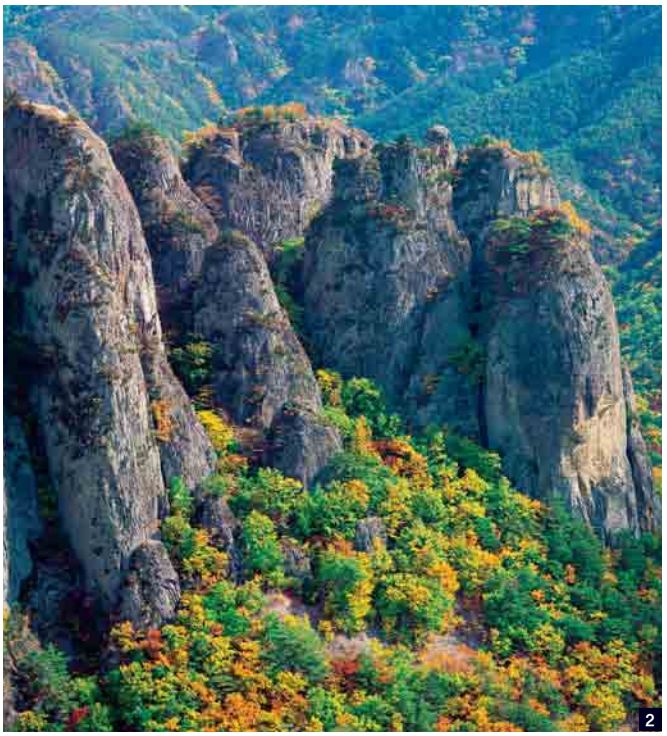


오대산 월정사 입구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서리 맞은 단풍이 이월 봄꽃보다 더 붉다(霜葉紅於二月花)'.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이 '산행(山行)'이란 시에서 읊조린 구절이다. 온 산을 수놓는 단풍은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가을 향기를 물씬 느끼고 싶다면 형형색색 물든 단풍길을 걸어보자.

이번 단풍은 10월 중순 설악산에서 절정을 이뤄 11월 초순 내장산과 지리산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져 단풍이 더욱 선명한 색을 띠며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을 선정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벼운 걸음으로 나들이할 만한 아름다운 단풍길을 소개한다.



1 가야산 홍류동 계곡에 흐르는 물줄기와 붉은 단풍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2 주왕산의 바위 봉우리 곳곳에 단풍이 다양한 색깔을 띠며 어우러져 있다. 3 눈꽃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단풍이 아름다운 계룡산의 산책길. 4 핏빛처럼 선명한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단풍.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단풍길

가야산국립공원 가야산 소리길은 대표적인 저지대 탐방로로 누구나 부담 없이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붉은 가을 단풍에 흐르는 물까지 붉게 보인다 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 계곡을 끼고 길을 걷다 보면 단풍의 정취와 함께 계곡의 물과 새, 바람 등 자연의 소리도 함께 느낄 수 있다. 특히 상암~영산교 구간은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주왕산국립공원 주왕산 절골 계곡의 단풍길은 주산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한적한 탐방을 즐길 수 있다. 절골 계곡 탐방로는 왕복 7km로 꽤 긴 코스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험난한 길이 없고 완만하게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불꽃 같은 색채를 즐길 수 있는 단풍길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의 단풍은 핏빛으로 비유될 만큼 선명한 색채를 자랑한다. 또한 피아골과 뱀사골 등 풍치가 뛰어난 계곡과 어우러진 붉은 단풍은 단연 최고로 꼽힌다.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 구간은 총 8km로 탐방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린다. 특히 지리산 피아골 계곡 단풍은 직전마을에서 연주담, 통일소, 삼홍소까지 이르는 구간이 으뜸으로, 이곳에서 멋진 절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사찰의 여유로움이 있는 고요한 단풍길

계룡산국립공원 계룡산에는 갑사, 신원사, 동학사 등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있어 호젓한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5리 숲'이라고 불리는 계룡산 갑사 진입로부터 이어지는 단풍길이 장관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의 수렴동 계곡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거쳐 수렴동대피소까지 이어지는 길로 설악산 단풍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은 산길이 평지처럼 순탄해 걷기 좋고, 오색단풍과 투명한 계곡이 대비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게 느낄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로 25선

국립공원	탐방 적기	탐방로	거리와 소요시간(편도기준)	탐방로 특징
가야산	10. 28~11. 11	무릉교~농산정~영산교(소리길 일부 구간)	3.9km 2시간	계곡길
경주	10. 24~11. 8	암곡~무장봉~암곡	8.5km 4시간 (왕복)	계곡길
계룡산	10. 21~10.31	갑사~용문폭포~남매탑~동학사	7.6㎞ 3시간 20분	능선길
		갑사~연천봉~전망대~은선폭포~동학사	8.2㎞ 4시간 30분	계곡길
내장산	10. 17~11. 15	내장탐방지원센터~내장사	3km 1시간 30분	산책길
		탐방안내소~원적암~벽련암~탐방안내소	3.8km 2시간 (왕복)	산책길
덕유산	10. 15~11. 5	안성~동엽령	4.5km 2시간	계곡길
		구천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	6km 2시간 30분	계곡길
북한산	10. 19~11. 1	교현탐방지원센터~우이탐방지원센터(우이령길)	4.5km 2시간	둘레길
변산반도	10. 30~11. 13	내변산분소~직소폭포	2.2km 1시간	산책길
설악산	10. 16~10. 25	백담사~수렴동계곡(영시암)	3.5km 2시간	계곡길
	10. 10~10. 20	비선대~천불동계곡(천당폭포)	6.5km 3시간 30분	계곡길
오대산	10. 14~10. 23	무릉계~구룡폭포(소금강)~무릉계	5km 2시간 (왕복)	계곡길
	10. 9~10. 18	월정사입구~동피골~상원사(선재길)	8.1km 4시간	계곡길
월악산	10. 24~11. 10	만수교~마의태자교~만수교	2km 1시간 (왕복)	계곡길
		미륵리사지~하늘재	2km 1시간 30분	산책길
월출산	10. 31~11. 15	도갑탐방지원센터~억새밭	2.7km 1시간 20분	능선길
주왕산	10. 24~11. 8	상의탐방지원센터~용추폭포~상의탐방지원센터	4.4km 2시간(왕복)	산책길
		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절골탐방지원센터	7km 3시간(왕복)	계곡길
지리산	10. 15~11. 5	직전마을~삼홍소~피아골대피소	4km 2시간	계곡길
	10. 16~10. 25	뱀사골탐방지원센터~요룡대~뱀사골탐방지원센터	4km 2시간 (왕복)	계곡길
치악산	10. 17~11. 8	구룡탐방지원센터~세렴폭포	3km 1시간 30분	계곡길
	10. 9~10. 25	성남공원지킴터~상원사~남대봉	5.9km 2시간 30분	계곡길
속리산	10. 12~10. 24	화양동탐방지원센터~학소대(화양계곡)	2.3km 1시간	계곡길
무등산	10. 24~11. 7	원효분소~바람재~원효분소	6.8km 2시간 30분 (왕복)	산책길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 선재길은 사찰로 가는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마사토와 모래, 황토 등이 섞인 흙길은 걷기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감동을 안겨준다. 길마다 계곡과 단풍이 잘 어우러져 나들이하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도심에서 가까운 단풍길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 둘레길인 우이령길은 서울 우이동에서 경기 양주시 장흥으로 이어진다.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길은 수많은 나무들이 자리해 단풍과 함께 가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낸다. 전체 구간이 완만해 어린이나 노인도 큰 어려움 없이 단풍 산책을 할 수 있다. 특히 도봉산의 명물인 오봉전망대는 붉은 단풍에 둘러싸인 장관을 연출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꼽힌다. 다만 탐방 예약 인원을 1일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단풍 성수기 주말에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전통 단풍 명소

내장산·치악산·속리산·무등산국립공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장관을 자랑하는 단풍길 명소도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탐방지원센터~내장사와 탐방안내소~원적암~벽련암 구간, 치악산국립공원의 구룡탐방지원센터~세렴폭포와 성남공원지킴터~성원사~남대봉 구간, 속리산국립공원의 화양동탐방지원센터~학소대 구간, 무등산국립공원의 원효분소~바람재 구간은 매년 단풍으로 곳곳이 멋진 절경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억새밭에서 만나는 가을 낭만

경주·월출산국립공원 가을 낭만이 꼭 단풍의 전유물은 아니다. 경주국립공원의 암곡 억새밭과 전남 영암 월출산의 도갑지구 억새밭을 지나다 보면 은빛 물결을 이루는 억새들 사이에서 단풍과는 색다른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G









1 설악산 백담사의 수렴동 계곡 물을 따라 어우러진 단풍. 2 북한산 우뚝 솟은 바위와 형형색색의 잎이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다. 3 온 산을 수놓은 단풍에 파묻혀 있는 것만 같은 백양사. 4 가을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월출산 억새밭.



가을 산행 시 유의사항

1. 날씨와 복장은 미리미리 챙겨요!

가을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큰 일교차로 체온 유지가 쉽지 않다. 특히 산은 도심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킷과 모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옷은 일교차가 심할 때는 두꺼운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비옷이나 배낭커버 등도 준비하자.

2. 개인 체력에 맞는 산행계획을!

즐거운 가을 산행만을 기대하고 무턱대고 산에 올랐다가는 큰코다치기 쉽다. 코스별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산행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명 단풍관광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소요시간을 넉넉하게 계산하고, 여름보다 해가 짧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는 하산 준비를 해야 한다.

3. '등산스틱·헤드랜턴', 산행 안전용품 챙겨요~

등산스틱은 하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20~30% 정도 팔로 분산시켜 무릎관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체균형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산행 중 발목을 다쳤을 때 목발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응급조치 도구로 유용하다. 헤드랜턴은 일조시간이 짧아진 가을의 늦은 하산이나 조난에 대비해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4. 운동화 끈만 잘 매도 사고 방지!

산길을 오랜 시간 걷기 위해서는 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산화는 험한 등산로에서 발을 보호하고 마찰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산행계획에 따라 등산화를 선택하자. 특히 등산화는 끈만 잘 매도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다. 오르막길에서는 끈을 조금 느슨하게 매고 내려올 때는 단단히 조여 발의 무리를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K 스마일 캠페인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떠나세요

가을은 짧지만

가을의 추억은 깁니다



[강원도 대관령 양떼목장]

가을
2015 관광주간
(10.19~11.1)

미소와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과 가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주간!
지금 바로 [관광주간]을 검색해보세요 (http://fall.visitkorea.or.kr)

정부3.0 1330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참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참여기업 아시아나항공, 롯데렌터카, 한화호텔&리조트, 대명리조트, 이랜드파크, 호텔현대, 롯데호텔, 드마리스, 아마트, 롯데아트, 홈플러스, 하나카드, 롯데월드, 에버랜드리조트, 한국민속촌, 365세이프타운, 비젼코베아, 슐페이아웃도어, 세일푸나잇, 호텔엔조이, 호텔조인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야생화 신약 대박’

개똥쑥에서 치료 성분 개발한 중국인 노벨상 수상… 우리도 천연물 신약 개발 총력 대응 필요

글·사진 이동혁 | 야생화 칼럼니스트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했던가. 하지만 개똥쑥은 다르다. 진짜 약으로 쓸 수 있는데도 너무 흔해서 외면당한다. 이런 개똥쑥을 연구한 사람이 올해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투유유(屠呦呦)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1600년 전 고대 의학서에서 영감을 받아 개똥쑥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시닌’이라는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활용해 많은 생명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중국인 과학자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화 활용한 제약산업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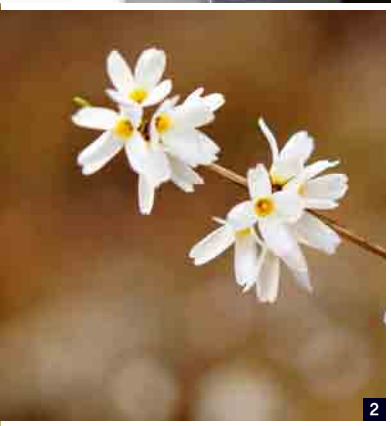
투유유 교수는 정부의 지원 아래 말라리아 특효약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혁명 이후 과학기술 인재 부족을 직시하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많은 중국 과학자들을 귀국시켜 첨단기술을 양성하기로 했다. 중국과학원은 1994년 해외에서 과학자 1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백인(百人)계획’을 세웠고, 이런 흐름은 후진타오 정권의 ‘천인(千人)계획’, 시진핑 주석의 ‘만인(萬人)계획’으로 이어졌다. 즉 중국인의 노벨상 수상이라는 성공 뒤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구실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투유유 교수처럼 야생화를 활용해 신약(新藥)을 개발할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새로운 질병에 대항하는 야생화 신약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실제로 타미플루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야생화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2009년 당시 타미플루는 거의 유일한 치료제로 품귀현상을 빚었다. 타미플루는 중국의 자생식물이자 대표적 향신료인 팔각(八角)의 열매와 뿌리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었다. 스위스의 제약회사인 로슈홀딩은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하며 연간 20억~30억 달러(약 2조~3조 원)를 벌어들인다고 한다.

제약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의 꽃이다. 제약 기술이 없는 나라는 약을 수입에 전량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는 주목(朱木)에서 개발한 항암제 택솔로 연간 12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다. 한편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아스피린은 매년 600억 정(판매액 100조 원 이상) 이상 판매되는데 이는 한 나라의 경상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성신약이 대세였다. 아스피린이 바로 대표적인 합성신약이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과 아세







(왼쪽) 개똥쑥.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찾은 투유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1 최근 천연물 신약 개발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약 개발 모습. 2 미선나무. 항염증제와 항암제로 쓸 수 있는 유효 성분이 미선나무에서 나왔다. 3 버드나무. 매년 100조 원 이상 팔리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로 만들었다.

트산 무수물(無水物)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는 현대의 질병을 단일 인공성분만으로 이루어진 합성신약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다국적 제약사들은 천연물 신약 개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합성신약에 비해 천연물 신약은 부작용이 적고, 현대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적합하며, 개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개발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확실한 선두그룹이 없는 블루오션 분야라는 이점도 있다. 무엇보다 천연물 신약 개발산업은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천연물 신약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야생식물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물론 독일과 중국 등에서도 천연물 신약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중증질환 치료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심혈관계·부인과·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이 처음으로 식물 약에 대한 산업 기준을 만들어 새로운 약재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제도부터 정비한 것으로, 우리 정부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합성신약 대신 천연물 신약
난치성 치료 적합, 개발 가능성 높아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동의보감과 같은 수백 년간 축적된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다. 실례로 세계 천연물 신소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책 연구개발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이오의료개발사업(유전자동의보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은 '천연물 복합성분이 인체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가상인체 컴퓨터 모델과 멀티오믹스 등 융합원천기술로 규명해 미래창조형 헬스케어 신소재를 발굴한다'는 목표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년간 155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식물자원이 널려 있다. 미선나무에서 항염증제와 항암제로 쓸 수 있는 유효성분을 찾아내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흔하디흔한 짚신나물에서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이 발견돼 개발 중이다. 긴산꼬리풀을 원료로 한 천연물은 획기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로 제품화 단계에 있으며, 야생다래에서 알레르기 치료제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때죽나무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추출물을 얻어내 활성물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황련(깽깽이풀) 등을 활용한 고지혈증 치료제는 이미 외국에서 독성 및 임상 시험을 완료한 상태다. 이 밖에도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우리의 식물자원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천연물 신약은 합성신약보다 개발비와 시간이 덜 들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2호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받은 풀리작은 허가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같은 산업적 특성을 간과한 채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는 이유로 천연물 신약 육성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내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투유유 교수가 나올 것이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일본식 표현 등 없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포태→임신' '최고→촉구'로 바뀐다



구분	예시	
	현행법	개정안
일본식 한자어·표현 개선	窮迫(궁박)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要하지 아니한다	필요하지 않다
	1町步(정보), 100坪(평)	9917.36제곱미터, 330.578제곱미터
어려운 한자어 개선	催告(최고)	촉구
	蒙利者(몽리자)	이용자
	胞胎(포태)	임신
	忍容(인용)	참고 받아들여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相當(상당)한	적절한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表意者(표의자)	의사표시자
	複任權(복임권)	복대리인(複代理人) 선임권
양성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親生子(친생자), 양자(養子)	친생자녀(親生子女), 양자녀(養子女)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當期後(당기후)의 一期(일기)를 經過(경과)함으로써	그 기간이 지난 후 다음 기간이 끝날 때에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상호 면접 교섭할	서로 만나고 교류할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法律行爲에 依하여 授與된 代理權은 前條의 境遇外에 그 原因된 法律關係의 終了에 依하여 消滅한다. 法律關係의 終了前에 本人이 授權行爲를 撤回한 境遇에도 같다.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된다. 1.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이해를 위해 괄호 안에 한글을 명기했음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포태(胞胎), 몽리자(蒙利者), 제각(除却), 구거(溝渠)… 단번에 그 의미를 알기 쉽지 않은 단어들. 이처럼 어려운 민법 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가 2년여에 걸친 개정작업 끝에 내놓은 '알기 쉬운 민법' 최종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전체 조문 가운데 1056개 조문을 정비했다(총칙편 152개, 물권편 187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이번 민법 개정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57년이 지났는데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용어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한자를 병기하기로 했다. 일본식 단어와 표현, 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 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되, 국민에게 잘 알려진 용어와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복잡한 구조의 법문은 이해하기 쉽도록 '항'이나 '호'로 나누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했다. 다만 개정으로 말미암은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됐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 등)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법률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과 국민 생활의 소통 기회가 증가하고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돼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남극 탐험 30년 기념 국립해양박물관 '2015 극지 체험 전시회'

부산에서 만나는 남극과 북극



한국극지연구진흥회

9월 18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2015 극지 체험 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1985년 11월 16일 오후 2시 23분. 앞으로 더 큰 감격이 있을까. 현재까지 나의 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관측 탐험대원이 남극 킹조지(King George) 섬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을 기록한 일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남극 탐험 30년을 기념하는 '2015 극지 체험 전시회'를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11월 20일까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 중이다.

도전 정신과 남·북극 이해 계기

극지란 위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북극, 남극을 가리키는 용어다. 극지는 인류 최후의 미답지이자 지구의 기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지구 환경 기록 보존소'로, 백야(白夜 : 남·북극에 가까운 지방에서 밤에도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는 현상), 극야(極夜 : 겨울철에 오랫동안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되는 현상), 해빙(海氷 : 바닷물이 얼어 얼음이 생기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탐험대가 크고 작은 탐험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등을 통해 일련의 극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985년 시작된 한국 남극 관측 탐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 탐험에 성공했던 당시 대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남극 관측대 깃발, 탐험 일기, 사진 등 기록물 40여 점도 전시돼 관람객들은 그간의 우리나라 극지 진출 역사와 활동 성과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펭귄, 바다표범, 조류, 남극대구 같은 극지 동물과 해조류, 이끼류와 같은 극지 식물과 광물을 표본으로 접할 수 있고, 극지 연구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북극 한파 시뮬레이션, 장보고과학기지 모형 조립대회, 빙하마을 체험존, 극지 사진전, 극지 영상관 등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부대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장보고과학기지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가량 화상전화로 남극에 있는 월동대원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극지 체험 전시회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추워지면 먹는다… 또 먹는다



동아일보

추운 날씨에 더 많은 이가 찾는 핫 초콜릿 브리즈.

김창엽
자유기고가

"여보,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핫초코 좀 사야죠?", "하하, 당신은 날만 추워지면 어김없이 핫초코를 찾네요. 여름에는 입에도 안 대면서." 지난 주말 마트에서 장을 보던 40대 C씨 부부가 이런저런 물건을 고르면서 대화를 나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을,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는 건 언뜻 생각하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듯, 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탕 종류를 찾는 예도 적지 않다. 또 겨울에도 떠먹는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 음식의 차고 뜨거움이 음식 선호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메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아마도 개인의 기호일 것이다. 그러나 기호를 떠나 계절별로 선호되는 음식 유형도 있다. 추울 때는 대체로 열량이 높은 메뉴에, 더울 때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에 마음이 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육류는 열량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인데, 다른 계절보다는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는 겨울이 261g 정도로 가장 많고, 가을이 255g, 봄과 여름은 각각 244, 247g으로 적은 편이다. 계절별 수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여름철에 해가 길고 휴가나 야외활동 등이 많아 고기 수요가 커질 요인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통계수치라 할 수 있다.

겨울철은 사실 고기류 외에도 식품 총섭취량이 단연 높은 계절이다. 바꿔 말해 겨울철은 열량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 이런 계절별 추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지역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겨울철에 열량 섭취가 늘어나는 걸까? 학자들은 추운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가을을 가리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접어들며 살이 찌는 건 말만이 아니다. 동면하는 곰은 물론 집 밖에서 기르는 개에 이르기까지 날씨가 추워지면 거의 모든 동물이 많이 먹고 살을 불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인류의 조상들도 혹독한 겨울을 나려면 가을부터 충분히 먹어두어야 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겨울에는 열량 섭취가 적어도 살이 불어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햇빛 노출이 적은 겨울철에는 비타민D 생성이 줄어드는데 비타민D가 줄어들면 지방 분해 속도 역시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혹독한 겨울나기를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또 일조량이 적은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계절성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세로토닌 수치는 열량 섭취가 늘어나면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겨울철에 먹을 것을 많이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삶의 모순과 갈등 극복하는 법



에머슨 인생학
서동석 지음 | 팝샷 | 238쪽 | 1만3000원

윤용근
위클리 공감 기자

당신은 초절주의(超絶主義)를 아십니까?

1800년대 중·후반 미국은 격렬했다. 독립 후 계층 간 대립과 전쟁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당연히 모순과 갈등이 많았다. 이런 환경에서 초절주의가 태어났다. 초절주의는 미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정신으로, 어떤 현상의 안과 밖을 동시에 아우르는 낭만주의 철학이다. 저자는 19세기 사상가이자 문인이었던 랠프 월도 에머슨의 초절주의를 다룬다. 에머슨은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삶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립이다. 자립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려면 지속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자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면서도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신이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

물질주의가 팽배할수록 인간성 파괴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다. 물질이 정신을 크게 앞서면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고, 정신이 물질을 지나치게 앞서면 삶이 공허해지기 쉽다. 에머슨은 양자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다. 자연 속에 투영된 이상적인 정신을 지향하면서 현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또한 고통스럽고 골치가 아프다. 인류애 같은 고귀한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오지만, 남녀의 불장난은 지나친 집착과 욕망으로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인 사랑이 되려면 끊임없는 이해와 용서를 통해 정신적으로 승화되어야 가능하다.

"내 방 창문 밑에 핀 장미는 이전에 피었던 장미나 자기보다 아름다운 장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장미처럼 자연과 더불어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하거나 굳세게 살 수 없다."

에머슨은 일상의 자연과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 인간의 삶은 순간순간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를 잡을 수도 없다.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즐길 수 없다. 일상이 곧 한 사람의 일생임을 강조했다. 에머슨의 인생철학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동양철학도 받아들인 그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유동적인 삶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세상의 변화와 삶은 단편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다. 에머슨은 양면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망갈 수 없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극복하는 에머슨의 '초절'하는 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진실을 찾는 '목소리 소설'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평론가

세계문학의 고향으로 불리는 호머의 〈일리아드〉는 다 아는 것처럼 트로이전쟁 이야기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후원하는 그리스군과 풍요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성원하는 트로이 사이의 전쟁. 아킬레우스의 분노에서 시작하여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 서사시에서 그리스 쪽은 주로 남성의 전쟁과 영웅의 이야기가 두드러지는 반면, 트로이 쪽은 여성의 길쌈과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테나와 아프로디테의 차이는 양쪽의 분위기를 그토록 다르게 만든다. 〈일리아드〉뿐 아니라 모든 전쟁 이야기에서 전쟁터는 남성의 몫이고, 그 후방에서 생활하고 사랑하는 것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어디 전쟁터가 남성만의 무대였으랴.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그런 질문을 통해 전쟁과 인간의 본성에 다가서려 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직접 전쟁을 겪은 200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성적(多聲的)으로 엮은 이야기다. 그만큼 생생하고 시린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생생한 목소리들은 역설적으로 허구보다 더 허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해 작가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귀담아들은 결실이다. 그녀의 체르노빌 이야기(〈체르노빌의 목소리〉)도 그렇거니와, 알렉시예비치의 이야기는 주로 제국의 멸망이나 전쟁, 참사를 직접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의 이야기, 공통의 역사를 만들려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는다.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 불신, 환영, 희망, 불안에 대해 써왔습니다. 제 작품의 장르를 '목소리 소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은 후 이야기를 잘 조합하여 완성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자신을 'a man of the pen(글쓰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면, 저는 저 자신을 'a person of the ear(듣는 사람)'라고 하고 싶어요."

좋은 귀를 지녔다는 것은 작가로서 큰 미덕인 것 같다. 제대로 듣기 전에 서둘러 판단하고, 진실을 이해하기 전에 순간의 이미지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세상이고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다른 이들의 경험과 고통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며 그 목소리들 사이의 현묘한 소통을 지향하기에 알렉시예비치의 이야기는 남다르다. 타고난 이야기꾼의 패턴화된 능숙함과도 거리가 멀고, 과잉 이미지와 현란한 몽상으로 포즈처럼 비치기 쉬운 수사와도 분명히 변별된다. 이미지 시대를 거스르는 '목소리 소설'을 새삼 주목하면서 작금의 우리 문학 풍경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많은 진실들, 여전히 듣지 못한 여러 목소리들이 있음에도 이미 있었던 사실과 표현의 영향으로부터 불안해하는 어설픈 게으름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그녀의 목소리를 거듭 들으며, 인간과 문학의 진실 문제를 숙고하게 된다.

"나는 세상을 목소리와 색깔로 간주합니다. 책마다 대상이 바뀌지만 이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기 때문이죠. 수천 개의 목소리로 일종의 작은 백과사전, 즉 우리 세대에 대한 백과사전을 만들었죠.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힘들게 행복을 구했을까요? 결국 행복을 잡았을까요?" G

제대군인주간

제대군인에게 걸어줄

가장 빛나는 감사의 메달



제대군인주간은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유지와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제대군인주간 (10.20~10.26)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국가보훈처

문화융성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스포츠,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고궁 무료·할인 관람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문화가 있는 날 을 검색하세요!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안내 : 02-760-4790~1